제6회

#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 발 표 자 료 집

**2020.10.29.**

덕산 스플라스 리솜



주최 Host | 충청남도 주관 Organizer | 한반도평화포럼 Korea Peace Forum 후원 Sponsor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제6회

#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 목차


기조연설

05 **한반도평화경제시대의 비전과 환황해권의 역할·과제**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특별세션 : 평화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10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세션 : 번영 1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34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46 **인구변화추이**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본세션 : 번영 2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56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황해 연안의 바다와 사람, 갯벌을 중심으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

본세션 : 공생 1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88 **산동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
**투커구어**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

96 **한류원천(韓流源泉) 유교문화 :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지진호** 건양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학과 교수

본세션 : 공생 2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106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Covid19 유행과 감염병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한반도평화경제시대의 비전과 환황해권의 역할·과제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 한반도평화경제시대의 비전과 환황해경제권의 역할·과제

2020.10.29

이 종 석

1

# 왜,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말하나?

## 한반도평화경제시대란?

-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

## 한반도평화경제시대 실현의 조건

-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남북군사대결 종식
  -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비핵화 협상 진전)
  - 남북 군사적 대결 완화(해소), 비핵화 진전되면 사실상의 종전상태 진입 가능
- 북한의 변화: 경제중심 국가전략 전환과 개혁개방
  - 국정운영의 전환: 군사 중심 → 경제 중심
  - 시장경제의 확대와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 남북 win-win의 경협구조
  -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북한의 비교우위 경제 자산 보유 필요

## 이미 '북핵문제'를 제외한 한반도평화경제시대 실현 조건 충족 상황!

- 북핵문제 해결은 '평화'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남북공동번영의 기반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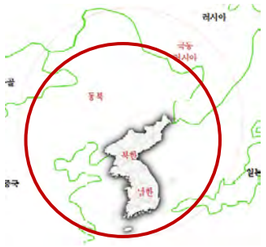
# 한반도평화경제시대가 창출할 동북아 경제지도, 북방경제

## 북방경제의 개념

-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 극동 러시아, 몽골, 동해에 연한 일본 서부지방을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하나의 경제협력체'로 상정한 현재 미실현(未實現)된 잠재적 경제협력체
- 북방경제 형성은 역내 협력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줄 것으로 전망

## 북방경제 실현 전망

- 지리적으로 이 권역의 중심에 위치한 북한의 핵 실험과 유엔 경제제재로 인해 그동안 실현 불가능한 상태.
- 최근 북한의 경제전략 변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2018~)에 따라 북방경제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
- 이 지역 당사국들의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도 매우  강함
  - 중국: 일대일로와 신(新)동북진흥계획 / 러시아: 신동방정책
  - 한국: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 북한: 경제발전총력집중 노선과 경제개발 정책
- 현재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문제의 진전과 해결이 마지막 관건




## 북방경제 실현 시 기대효과

- 한국 경제의 도약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 정착시킬 것임
- 북방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남북경협을 확장시킬 것임







# 한반도평화경제시대를 향한 환황해경제권의 역할

## 환황해경제권은 환동해 및 접경지역 경제권과 함께  한반도평화경제시대의 삼두마차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은 첨예한 대결지대의 평화협력지대로의 전환을 통해 평화경제의 모범 창출 의미

## 평화적 역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견인자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은 그동안 황해권 발전을 가로막은 결정적 장애물이었던 NLL의 평화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 역으로 남북 대치선으로서 NLL의 성격 소멸되면 황해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가속화 예상
  - NLL일대의 평화협력특별지대화: 대결지점의 협력지점으로의 전환 의미
- 냉전의 바다가 활기찬 경제협력의 바다로 전환됨으로써  황해에서 美中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 차단

## 경제적 역할: 남북중 공동협력·공동번영의 전형 창출

- 환황해권 국가(도시) 간 (해상)관광, 물류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지난 시기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황해를 매개로 한 남북중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가능케 할 것임

## 문화적 역할

- 지중해 못지않은 초국경 해상교류를 통한 황해문화 창출 가능성









# 한반도평화경제시대 실현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과제

## ' 국가전략으로서 남북평화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 환황해 경제권 실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국민홍보

- 환황해 경제권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실현 시 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홍보 필요

## (환) 황해경제권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 모색

- 환동해 경제권의 기축(基軸) 도시(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관련 지방정부 및 중국 청도·연태·천진· 대련, 북한 남포·해주 등을 하나의 공동경제 이해주체로 묶는 네트워크 형성 추구
  -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 개최
- 3국 연계항로 항로(航路) 조기 연결
- 교류협력 회의체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

## 환황해 국가(도시) 간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협력의 연계 및 강화

- 동북아 평화증진에 기여

##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추진: 유엔제재 틀 준수하되, '제재 유예 인정' 획득 노력 필요

- 남북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의 기반 구축 위한 교류협력 추진 / 동포애적 인도주의 정신 실천

-- 끝 --

제1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1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특별 세션 : 평화

#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좌 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발 표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위샤오화**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류샤오타오** 중국 과기일보 서울지국장
**오카사카 켄타로** 일본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고봉준(충남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환황해권 지역 국가들 간 평화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해에 접해있는 중국 발해만 지역과 한국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 그리고 일본 규슈지역을 통칭하는 환황해권은 1990년대 이래 지역단위의 기능적 경제공동체 성격으로 발전하여 왔다. 초기에 주로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민간 주도로 진행된 환황해권의 협력 네트워크는 관련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들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되었고[1], 현재는 한·중·일 세 나라 중앙정부 대표들도 참석하는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되고 있다.[2] 즉 환황해권 지역 내의 교류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발표한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2040"은 이러한 다층적 네트워크 협력 발전의 흐름에 부응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경제구축, 초국경 지역공간 조성 및 환황해 공동체 창출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수준의 구체적인 중점 사업을 선정한 이 계획에 바로 오늘의 토론의 장인 환황해포럼도 포함되어 있다.[3] 이 글의 초점은 이렇게 다층적으로 심화되는 환황해권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여 환황해권 국가들이 안보 영역에서도 협력을 촉진시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소위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

1) 이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여시재, 아시아성장연구소 공동연구,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도시 대 도시, 에너지, 금융" (2017) 참조.
(https://www.yeosijae.org/posts/443?project_id=8&topic_id=3)

2) 예를 들어 이런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기술 협력 방안 특히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한·중·일 3국 지역 간 협력 및 기업 간 교류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http://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162344&bbs_cd_n=81).

3) 충청남도, "환황해 이니셔티브 시행계획 2040," (2018. 12).

국가 간 협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자유주의 이론의 관점에서는 협력의 이익이 구체화될 때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참여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과 수·출입의 증가 등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 즉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을 제공할 것으로 이해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이 2012년 11월에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은 2014년 타결되어 2015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지만 한·일, 중·일 FTA 협상은 각각 정체된 상황이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초기에는 각각 일본과 중국의 주도로 경쟁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라는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는 하지만, 참여 국가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부문에서도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낮은 수준에서의 협력이 상위정치(hi-politics) 영역에서의 평화를 견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일 수 있다는 현실주의자들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환황해권의 미래지향적 균형 발전을 위한 목표가 역내 국가들에 공유되고 여러 수준의 행위자들이 참여가 제도화되고 이것이 지역 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 안보를 둘러싼 국가들의 이해 충돌이 그간 심화·확대되어온 환황해권 교류 네트워크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2절에서는 국가 간 교류협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정리한다. 3절에서는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 토론한다. 4절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언한다. 5절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비현실주의적(non-Realist)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무리한다.





## 2. 이론적 논의들: 평화, 그리고 레짐과 협력

### 1) 평화프로세스의 의미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서 평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의미는 단순히 전쟁 상태의 정반대 조건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분단 및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제외한다면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를 굳이 논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환황해권에 무력 충돌이 상존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퉁(Johan Galtung)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옹호자들에 따르면 평화를 전적으로 소극적 (negative peace)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갈퉁에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쟁의 당사자들이 무력 충돌의 종식에 합의하면 싸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소극적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평화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가깝다.

그러나 이 개념은 덜 노골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을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갈퉁이 제시한 또 다른 구분, 즉 직접적 및 간접적 폭력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4] 직접적 폭력이란 살인, 고문 등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반면 간접적 폭력이란 구조적(사회적 구조와 기제가 내재적 불평등을 만들어 빈곤이나 기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문화적(한 사회의 신념과 가치가 인종적 또는 종교적 편견과 같은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의 배경이 되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망을 정당화)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따르면 소극적 평화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 폭력의 부재로 정의할 수 있다. 적극적 평화도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긴 하지만 이는 직접적 형태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근절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의 구현을 위해서는 싸움의 중지만이 아니라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다루고, 사람들의 태도, 가치 및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환황해

4) Johan Galtung,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3(1990).

권의 현재 상황(비록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을 고려한다면,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는 우선 지속가능한 소극적 평화의 유지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평화 관념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그것이 '이상주의적(utopian)'이고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최소한 소극적 평화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은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무력 충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 평화에 대한 논의는 일견 소극적 평화, 즉 전쟁의 부재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기도 한다. 즉 서유럽의 경우에서처럼 직접적 폭력의 위험성이 약화된 곳에서 보다 적극적인 평화에 대한 고민과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확대된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의 집중은 자칫 전통적 안보 이슈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전통적 안보위협의 중요성과 정도가 절대적으로 축소되었는가? 아마 서유럽 지역에서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 될 것이지만, 환황해권의 상황은 다소 다르다. 따라서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방향성은 우선 소극적 평화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프로세스의 결과로서의 평화체제는 개념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규범, 규칙, 원칙, 절차 등을 의미하는 레짐적 요소와 이런 제도적 요인들을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데에 필요한 구성원의 상호 신뢰를 반영하는 관념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5] 현재 환황해권에서는 민간과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런 레짐적 요소와 관념적 요소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공유된 인식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6]

5) 최영종.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론과 제도적 디자인," 『국제관계연구』 제12권 1호 (2007).
6) 이는 기본적으로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 환황해권의 지리적 범위와 소속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 공유된 정체성이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2) 레짐과 협력

국가 간 협력의 제도화 및 평화의 심화에 대해 국제정치의 주류 이론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왔다. 먼저 현실주의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과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레짐(regime)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 레짐을 기본적으로 국제체제 내의 권력 배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7] 또한 레짐 하에서 관찰되는 협력은 레짐 없이도 어차피 발생했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어차피 강대국들이 자신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레짐을 창출하기에 레짐이 특히 강대국의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이다. 즉 레짐은 권력(power)이라는 실질적 독립 변수와 협력이라는 종속 변수 사이의 매개 변수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8] 따라서 국제 협력은 레짐 보다는 강대국의 관심과 국제 체제 내에서의 권력 배분 관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구조적 무정부의 압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국제 레짐의 활용을 강조한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국제 레짐이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이익의 수렴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여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협력은 국제 무정부 상황에서 레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협력은 레짐을 뒷받침하는 패권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레짐은 결국 참여한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협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준 행동절차를 수립함으로써 협력을 촉진한다.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협력을 기대하게 되면, 협력의 지속 가능성은 증대되게 된다.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상호 작용이 지속되는

7) John J, Mearsheimer, "The False Promis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3(1994/1995).
8) 이런 주장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의 세 개의 축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탄생을 들 수 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대전략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정도를 현실주의자들이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들이 상정하는 일회성의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상황은 실제 국가 간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다른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렇기에 현재의 결정이 미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협력이 합리적인 결정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협력의 성과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면 일회성으로 상대방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코헤인(Robert Kohane)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국제 레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첫째, 레짐은 다른 국가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알려주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레짐은 약속의 위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로 하여금 다른 행위자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오인의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레짐은 상호작용의 비용도 축소시킨다. 협력의 제도화인 레짐은 합의에 이르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일단 제도화된 합의에는 계속 반복되는 합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셋째, 레짐은 행위자 상호 간에 협력의 기대를 발생시킨다. 즉 레짐을 통해 상호 작용이 가까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기대는 결국 그런 합의를 위반했을 때의 평판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즉 레짐은 여러 국가 사이에서 다자적 협상의 중재, 상호 군사 사찰의 주선, 군비 통제 프로그램의 추진, 국제기구의 설립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간 소통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즉 국가 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런 갈등은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인식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구축, 즉 평화의 제도화 가능성을 관련 행위자들이 공유하여 공동의 안보이익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 3. 환황해권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물들

### 1) 지정학의 귀환

전술한 것처럼 냉전시기에 압도적이었던 전통 안보적 고민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여전히 권력정치적 요인들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 또는 국가 간 이해의 상충이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존재한다.[9] 이런 경향을 학자들은 "지정학"의 귀환의 측면에서 논의하여 왔다.[10] 굳이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탈냉전의 시기에 동아시아에 군사적 경쟁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가 최근에 전면에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이 한동안 국제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냉전 종식 이후 인간안보, 또는 포괄안보의 측면에서 여러 그간 관심을 덜 받았던 이슈들이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하였다.[11] 개발, 경제, 환경, 보건 등 인간(또는 자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가 안보연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군사력의 위협, 사용, 통제 등과 관련된 전통적인 안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마치 지정학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 둘째, 세계화의 진전으로 테러를 포함하여 해적, 환경오염, 마약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안보문제가 초국가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초국가적 안보 위협의 등장으로 지정학적 고민보다는 초국가적 협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셋째, 21세기의 시작을 전후한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미국이 전 지구적으로 패권에 가까운 지배력을 구축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할 정도였고,[12] 이런 상황에서 냉전

9) 여기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북핵 및 남북한 문제, 그리고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관계 및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경쟁이 포함된다.
10) 이에 대해서는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및 Robert S. Ros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 9, No. 3(2014) 등 참조.
11) 이런 논의는 주로 부잔(Barry Buzan)과 위버(Ole Weaver)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학파(Copenhagen School)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시기에 있었던 것 같은 지정학적 고민들은 한동안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촉발되고 이와 맞물린 소위 중국의 부상이 현실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수준의 대립이 지정학의 복귀를 알리게 되었다.

### 2) 미·중 대립의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정학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는 상황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견제와 포용이라는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되는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노선은 미국 우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미중 대립이 지역 내 협력의 고도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미국'이 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정책 기조를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로 명명하였다. '원칙적'이란 의미는 미국적 가치와 원칙(평화와 번영)을 중시하는 것이고, '현실주의'란 전통적인 세력경쟁과 강대국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은 미국이 탈냉전기의 전반적 자유주의적 태도, 그리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네트워크적 사고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13]

12) Stephen G. Brooks and William C. Wohlforth, *World Out of Balanc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hallenge of American Prim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13) 예를 들어, 오바마행정부의 국가군사전략보고서(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에서는 21세기에 미국이 원하는 지도력(leadership)은 군사력과 권력의 다른 요소들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가 다중심(multi-nodal) 체제, 즉 복합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가변적인 연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U.S. Joint Chiefs of Staff,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February 2011) 참고.





전술한 보고서에서는 특히 대표적 수정주의 국가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명시하여 미국 우선주의의 큰 장애물로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지역 세력 균형의 핵심 키워드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별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자유와 억압의 상반된 국제질서 간에 지정학적 세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지역 질서와 국익 보호를 위해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더불어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추구, 미군의 전진배치, 동맹 강화, 일본, 한국과 미사일방어 협력 및 지역방어체제 추구,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협력 증대 등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기지 건설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 통제권을 발휘하려는 노력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었다. 2018년 4월 17일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태평양사령관 후보였던 데이비슨 제독(Philip Davidson)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제외한(short of war with the United States) 모든 시나리오에서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14]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 더 나아가서 다른 해역에서의 지배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다른 곳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미국은 간주한다.[15]

결국 재균형을 넘어서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한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은 이전 행정부에서 중국과 경쟁은 하지만 협력도 병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노골적인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요인도 자유주의이론의 주장처럼 미중 간 대립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일차적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서 기

14) *Advance Policy Questions for Admiral Philip Davidson, USN Expected Nominee for Commander U.S. Pacific Command* (April 17 2018), https://www.armed-services.senate.gov/imo/media/doc/Davidson_APQs_04-17-18.pdf.

15) O'Rourke, Ronald. 2018. "China's Actions in South and East China Seas: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1).

인한 미국의 공격적인 대중 무역정책의 구사가 무역전쟁으로까지 묘사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소위 강대국 경쟁은 동아시아 지역과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양국 간 강대국 경쟁을 넘어서는 대립 구도가 역내에 고착 및 강화되면 한국에의 사드(THAAD) 배치 경우에 드러났듯이 지역 국가들이 매우 경색된 정책적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코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및 한반도 분단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비록 자국의 외교안보전략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소위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아시아에서의 적극적 인프라 건설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응하여 왔다. 즉 이는 단순한 해외경제개발 지원 전략이라기보다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적극적 타개 노력이 동아시아 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3) 일본의 보통국가화 진행

이런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공공연히 일본을 지역질서 유지를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미국을 위해 혹은 대신해서 지역 안보를 위한 역할을 강화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의 대응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일 삼자협력이 중요함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미일동맹이 주춧돌(cornerstone)이라는 거듭되는 미국의 언급은 점차 일본의 보통국가화 혹은 재무장으로 향하는 길을 닦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자위력 이상의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국방정책 또한 전수방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와 안보의 일종의 교환을 통해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해는 물론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 내에서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 주장이 힘을 얻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은 중국의 부상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에 노골적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나서기는 힘들다. 사실 인도·태평양 구상이 일본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존재하고, 그런 구상이 미국의 대중 견제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일본은 향후 지역 강국으로서 자리매김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역내의 다른 국가에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전적으로 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6] 따라서 미중 경쟁의 격화는 또 다른 지역 내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4) 전략무기 경쟁의 재연

또 다른 불안정 요인이 최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2019년 8월에 INF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 조약은 냉전 말기 미국과 러시아가 500-5,500km 사거리의 모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보유, 생산, 시험을 금지하는데 합의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그 주요 목적은 양국 간 단시간의 타격 능력을 가진 핵미사일을 제거하고 주로 유럽에서 재래전의 핵전으로의 자동 확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약의 탈퇴로 미국은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 및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약의 상대방은 러시아였지만, 미국의 이 조약에서의 탈퇴는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나왔다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다분하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도 중단기적으로 자국 미사일 전력의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는 양국의 군비 증강 경쟁, 더 나가서는 위기시 확전 가능성의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동아시아에 지상발사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고 있고, 그 유력

16) 김영호, "미중경쟁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 김학성·고상두 편,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한반도 문제의 구조적 이해』 (서울: 박영사, 2019), pp. 54-55.

한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억지력을 제고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중 강대국 대립의 격랑 속에 한국이 빠져 들어갈 가능성도 동시에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런 최근 행보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 간 이행이 2018년에 완료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 협정은 2011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발표되어 양국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시키고 운반시스템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2021년 2월 종료를 앞두고 2019년 7월부터 연장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측에는 그 연장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으며[17], 러시아도 최근에는 굳이 협상을 연장하지 않아도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고착되어 핵보유국들 사이의 군축 노력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면 비확산이라는 국제 핵질서의 근간이 다시 흔들리게 되고 이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의 달성에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아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북한 핵능력 고도화가 역내 평화프로세스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위 조약들의 폐기는 강대국 간 경쟁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5)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역내 전략적 대결 구도의 가능성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제2 핵시대에 있어서 국제 핵질서의 가장 주요한 도전 중의 하나이다. 북한 사례는 한 국가가 핵무기 제조를 정치적으로 결심했을 때, 그것을 국제사회가 막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북한은 2003년에 NPT를 탈퇴하였고, 2006년 10월에 최초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에 전개되었던 다양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3대 지도자인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동시에 핵무력의 완성을 이미 선언하였다. 물론 국제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적 공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진 상태이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비핵

17) 미국은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방의 핵군축 혹은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쉽게 동의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핵군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군축을 둘러싼 가장 큰 도전은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미국의 확장억지와 북한 핵무기의 대립에서는 결국 안보딜레마의 해소가 관건이다. 특히 북한이 구체적인 핵포기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막강한 핵공격력을 여전히 보유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방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데, 양 정상 간의 개인적 친밀함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리는 국내정치적 기반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운데, 역내에서 대미 견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핵능력 고도화와는 별도로 정권안보에 위협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여기에 가세하여 냉전 시기와 같은 북방삼각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게 되는 상황은 자칫 현재의 조용한 군비 증강 수준을 넘어서는 역내 군비경쟁의 촉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은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와는 반대의 부정적 역동성을 역내에 가져오게 할 것이다.

분명히 북한 핵능력 고도화로 대북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생기는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신냉전적 대립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동북아 지역 안보질서를 주도하거나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오판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신냉전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북한은 쉽게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지금보다 북한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아이디어는 역으로 신냉전적 안보딜레마를 가중시킬 수 있다.

## 4.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 추진 방향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방해할 많은 요인들이 역내 외에 산적하여 있다. 이런 요인은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켜 자칫 그간 심화되어온 환황해권 교류 네트워크의 수준을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은 탈냉전 이후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경쟁의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북한 비핵화 문제는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일방주의적 대 중국 강경책에 더해 소위 쿼드 플러스(Quad plus: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를 확대한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동맹연대를 통해 미·중 경쟁에의 대응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18] 또한 전술한 것처럼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의 진전의 부재는 역내의 전략적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추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들을 아래에 제시한다.

### 1) 외교정책의 비군사화, 군축과 군비통제

우선 역내 국가들의 외교정책을 비군사화(demilitarize)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무정부 하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 군사력 확보 필요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 하지만 환황해권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은 다분히 군비경쟁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안보를 위한 절실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가상 적국의 국방력 강화, 동맹으로부터의 요구 및 최신 군사 기술력 유지라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19]

18) 김현욱, "바이든 대 트럼프의 외교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29 (2020년 9월), p. 23.
19) John Feffer, "An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sian Perspective*, Vol. 33, No. 4 (2009), pp. 5-15.





중국은 이미 확장된 자국 이익의 보호를 위해 각종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히 원해 작전 능력 강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하여 왔다. 그 결과 중국은 효과적인 방어체제, 장거리 공격 능력, 통합 전투 체계를 가진 첨단 다기능 전함과 잠수함 등을 생산해 왔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의 해양지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는 팽창주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20]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소위 '유령함대(Ghost fleet)'를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으로 구성된 무인 함대로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유사시 인명피해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한국이 최근에 공개한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의 목적은 북한 및 주변국(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대한 전략적 억제와 대칭 전력 보유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20년 8월에 공개된 한국의 '2021-201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목표로 향후 300조원을 국방비에 투여하게 되어 있고,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0조 이상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주변 강국의 해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6000톤급 한국형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도입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런 움직임들은 국가 간에 안보딜레마가 작동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국 안보 증진을 위해 취하는 행동들이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맞대응하게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보다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그렇게 많지 않다.[21]

환황해권의 평화프로세스 추진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축 및 군비통제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내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구조적 불안정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군사력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이외에도,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군현대화 프로젝트,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

20) 최우선,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 정책연구시리즈 2019-26 (2020년 9월).
21) Andrew Bacevich, "The Endless Fantasy of American Power: Neither Trump nor Biden Aims to Demilitarize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Sep. 18, 2020).

임, 그리고 군사적 동맹의 틀을 확장시켜 지역 및 세계 패권의 유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군사적·정치적 신뢰가 부족한 환황해권 국가들이 기존의 불신과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에서의 군사력 유지를 유도해낼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는 전력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평화를 위해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군사력을 대외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른 얘기일 수 있다.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냉전주의적 국가안보 정책보다는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당면한 세계적 혹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이기주의적인 일방의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고, 무대응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황해권의 평화프로세스는 결국 역내 국가들의 평화적 상호작용의 선순환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선순환적 상호작용은 관계의 개선을 실마리로 해야 하고, 그런 관계의 개선은 객관적 위협의 감소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따라서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는 군축과 불가분 연계되어 있다.

유럽은 냉전 당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군사력으로도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환황해권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아직도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군비통제의 목표인 전쟁 가능성 감소, 전쟁준비비용 감소, 전쟁 발생 시 피해 축소 등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첨예한 대치의 상황에서 상호 합의에 의한 군축의 계기가 일순간에 마련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변국들 사이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는 역내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지는 물론 이를 물리적으로 드러내주는 군축 조치가 있을 때 더욱 굳건히 자리할 수 있다. 정치체제, 이념, 역사, 군사력, 경제력 등 여러 영역에서 상이한 역내 국가들이 불안정성을 축소시키고, 평화적인 경쟁 및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권력 관계에서의 변화에 내포되어 있는 위협이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그런 악영향은 군축을 통한 새





로운 질서 창출의 가능성을 통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 간 권력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한 군축 논의는 비현실적이고 시기상조라고 할 수도 있다. 일례로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논의와 조치들은 그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따라서 군비통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국제정치의 권력정치적 속성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축은 당분간 실질적으로 진척되기 힘들기에 각종 제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군사력의 기동 또는 사용을 억제하는 운용적 군비통제가 현실적으로 안보와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즉각적인 군축이 힘들다는 현실 때문에 평화프로세스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군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분석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재래식 군축의 경우 참여 국가는 다수였지만 사실상 양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환황해권 국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위기 인식은 군축의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환황해권의 군축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는 1990년대 유럽에서의 양 진영의 대치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축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22]

이런 의미에서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전개 과정에서는 한반도와 역내 국가들 간의 평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군축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축의 추진으로 일방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군축의 체계화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자안보대화 정례화라는 기반 위에 유럽의 다자군축협상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 비핵화 내용과 방식에 대한 합의 및 공동 노력

1993년에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 이후 30여년이 지나는 가운데, 북한은

22) Michael A. Levy and Michael O'Hanlon, *The Future of Arms Control* (Brookings Institution, 2005), pp. 124-127.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9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간의 비핵화 협상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핵무장한 북한은 현재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핵심적 사안이 되었다. 핵능력을 추구하여 확보한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내 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비핵화 협상의 기대 수준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가(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받으면서 협상을 선순환적으로 구조화시키고자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선 WMD 및 미사일 폐기 후 제재 해제'라는 소위 '빅딜(Big Deal)' 접근법을 고집하여 왔다. 이런 차이점을 좁히려고 한국 정부는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절충안으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일정 제재 완화라는 타협책을 모색하였다. 당분간 미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지만, 역내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핵화의 순서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핵화 개념의 불완정성을 보완해야 한다. 미국은 비핵화협상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원칙으로 고수하여 왔다. 이 개념과 관련하여 협상의 양측은 여전히 '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같이 하고 검증과 불가역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결국 미국이 북한에 CVID를 요구하는 이상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보장(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요구하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보장(FFVG: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을 요구하는 상황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실질적 진척이 있기가 힘들어졌다.[23]

셋째, 북한의 지속되는 핵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의 불만은 북한이 핵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는

23)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1호 (2019), pp. 75-76.





것이었다. 즉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핵을 폐기하겠다는 측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이는 핵폐기를 결심한 국가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섣불리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활동 중단을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북한 주장대로라면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체제 생존을 위해 구축해왔던 핵프로그램을 실질적 보장조치없이 포기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적 손실과 국제적 위상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 설득을 위한 시간과 대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핵폐기 프로그램에 동의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있다.[24]

이런 방식은 그간 한국 측에서 제시했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구조로 이뤄져 있다. 1단계에서는 북한이 미래 핵인 핵시설 폐기하고 이에 대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일부 완화가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현재 핵인 핵물질을 북한이 폐기하고 광범위한 대북제재 해제와 남북경협이 추진된다. 3단계에서는 과거 핵인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고, 이에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 북미 국교 수립, 평화협정 체결 등이 진행된다. 이 구상은 단계가 진전될수록 양측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가역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완전 비핵화한 북한의 체제보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완전 비핵화한 북한의 체제보장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국 및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비핵화와 체제보장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복합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과 관여가 북한 비핵화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동시에 과거의 역사에서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대응, 혹은 경제지원이나 관계 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어 통해 북한이 핵-경제 병진이 아

24) Michael O'Hanlon, "What Donald Trump Should Have Done with North Korea – and What the Next President Should Do," *The National Interest* (Sep. 1, 2020).

니라 비핵-경제 병진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 3) 북한의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의 참여와 정례적 협의 장 마련

사실 환황해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도발적 행동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담보하지 않는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는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다. 동시에 현재 한·중·일로 상정되어 있는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 북한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정상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환황해권의 평화와 안정을 논의할 때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추진한 소위 MIKTA 협력체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5] MIKTA는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한국 등 5개국 외교장관 합의로 출범한 비공식 협의체이다. 이들 국가들은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 공유, G20 회원국으로서의 의지와 역량을 보유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IKTA 출범의 목적은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하여 배타적 블록을 형성하기 보다는 투명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협력방식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부터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MIKTA의 유용성과 지속성은 참여국들의 공통 이익 확보에 달려있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협력 의제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제는 글로벌 공익(global interests)으로서 합의가 되며 국제적 규범으로 인정받는 이슈여야 할 것이다.[26] 이는 현재 환황해권에서 국가 하위 수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의제들일 수 있다(개발협력, 기후변화 및 녹생성장, 식량안보, 해양레짐). 따라서 초기에는 북한이 논의하기 원하는 의제들을 폭넓게 다룸으로써 북한의 참여 의지를 제고하고 추후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확산, 원자력 안전, 더 나아가서는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황해권의 한 축인 북한을 프로세스에 참여시키고, 지속가능한 정례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25)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등 5개 국명의 첫 글자.
26) 강선주, "한국의 중견국 외교: MIKTA 출범과 개발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31 (2013년 10월).





## 5. 나가는 말

현실주의이론이 상정하는 목표는 평화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존의 갈등구조를 평화적으로 선순환시킬 계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다.

전쟁단계(Steps to War) 모델은 영토분쟁의 유무, 분쟁 관계 국가의 동맹 유무, 분쟁의 재발 여부, 상호 간 군비경쟁 여부 등 네 가지 변수가 해당 국가들 사이 전쟁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27] 이 모델의 함의는 소위 '현실주의적' 처방(realpolitik strategies)의 비생산적 결과에 대한 경고에 있다. 강압적 위협, 군사력 증강, 동맹 등은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모델에서는 그런 수단들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모든 영토 분쟁이 전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으로 귀결되는 모든 영토 분쟁은 해당 국가들이 상기 현실주의적 대응을 했음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쟁으로 가는 현실주의적 경로(realist road to war)"라고 명명한다. 결국 영토적 분쟁과 경쟁관계, 현실주의적 처방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의 재생산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쟁회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주장이다.

환황해권 평화프로세스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적 긴장 요인들을 해결함으로써 평화의 제도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가 관통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착 문제와 직결되어 있

27)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Assessing the Steps to Wa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Issue 4 (October 2005), pp. 607-633.

다는 점에서 두 이슈는 분리되어 논의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화 없이는 환황해권 평화의 안정화와 그것을 지지하는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의 주장처럼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원칙, 규범, 그리고 정책결정절차의 조합"이 확립될 수 있다면,[28] 국가 간에 협력의 관습이 확대되고 국가들의 상충하는 목표들을 조정 및 수용하고 이해관계나 가치를 둘러싼 경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관건은 환황해권 국가들 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가 생길 수 있는가이다. 물론 출발은 관련국들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그러한 인식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은 일견 양방향성을 지닌다. 즉 한편으로는 국경 폐쇄,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폐쇄적 민족주의적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가치재로서의 의료서비스(경합성, 배제성)에 공공재(비경합성, 비배제성)로서의 성격을 부가하여 정부의 개입과 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후자의 현상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간 협력과 다자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로 지칭하기도 한다. 하나의 주체가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다양한 행위주체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이런 상호의존의 확대가 새로운 질서로 제도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향후 환황해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28)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Spring 1982), p. 185.



제16회
#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 본세션 : 번영 1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좌 장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 표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 론 **신혜종**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니나 모라르 보울** 주한 덴마크 대사관 보건&의료 참사관
**노자와 사치코** 도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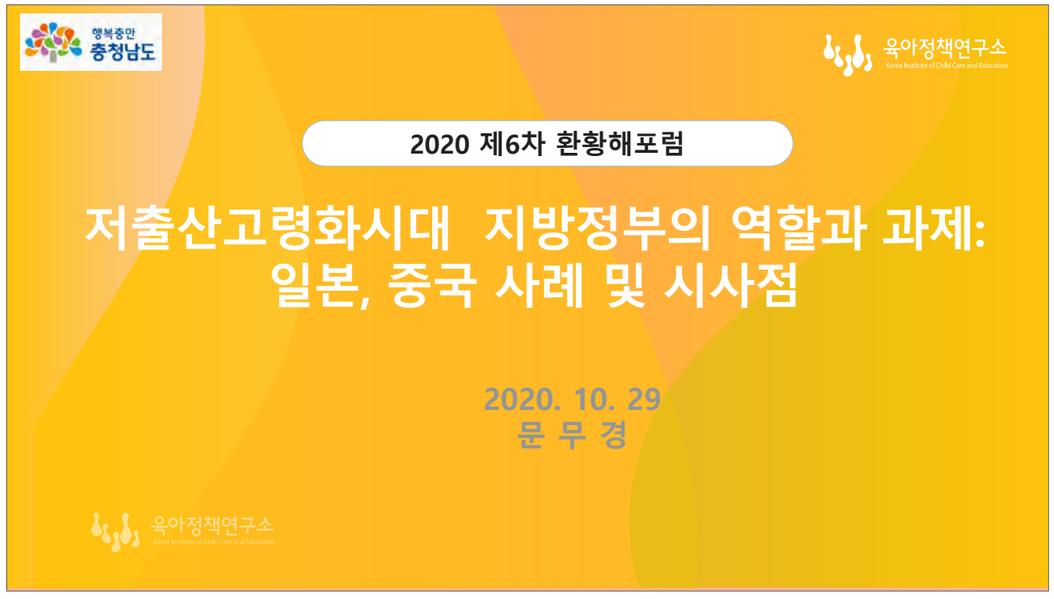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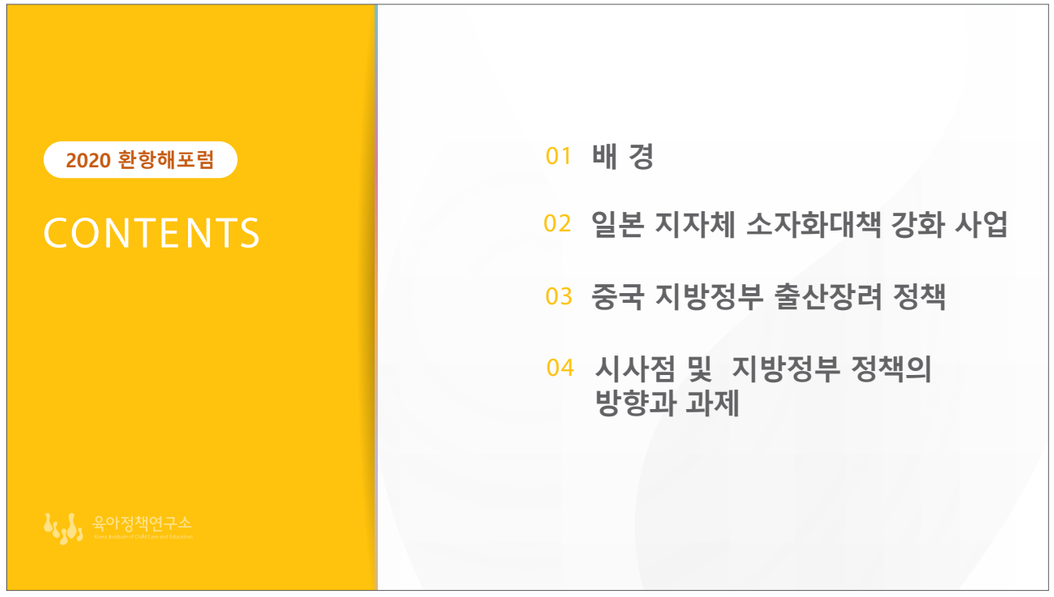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배 경

- **인구학적 변화, 가족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
  - **저출산과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 증가**
  - **의도적 무자녀 가족 증가**
  - **이혼율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문제**
  -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변화**.

➢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상 파악 필요**(문무경 외, 2016)
(취약한 경제상황으로 가족 구성에 대한 두려움, 젠더관점에서 평등한 성역할 추구, 일과 생활(여가) 균형 중시)(강동수, 2020)



## 인구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 **제1차(2005-2010): '육아'에 초점 보육정책에 비약적 발전(19.7조)**
✓ **제2차(2011-2015): '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초점, 난임제도, 육아휴직, 0-5세 무상보육 (60.5조)**
✓ **제3차(2016-2020): '결혼'에 초점, 보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청년고용)과 주거정책, 양성평등 등으로 접근 범위 확대 및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108.4조,추계)**
-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

* 제3차 기본계획 수정(2019-2020) : **시간, 문화, 삶의 기반 강조**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 **부모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포용적 가족문화 등**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평가** (강동수, 2020)
  - ✓ 유아교육보육, 신혼부부 주거지원, 남성육아 참여 활성화 등이 주요 사업
  - ✓ 돌봄지원 및 주거지원 중심 사업이 전체 예산의 82% 차지
    - ➢ 현금지원 강조 정책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호응 및 지속가능성 낮음





## 제2기 인구정책TF 의 전략 및 세부과제

- **도전요인: 인구감소와 구조변화**
- **4대 전략 및 세부과제**
  - ✓ 인구감소 충격 완화
    -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개개인의 노동생산성 제고
  - ✓ 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 대응
    -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
    - 관련 제도·산업 재설계




##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

- 총 1,784개의 지원 정책 (2018년 대비 2019년에 2.1% 증가)
  - ✓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 (82.8%)**
    - 2018년 대비, **출산 및 결혼 분야 지원사업의 증가 추세**
  - ✓ 대표적 신규 사업
    - 서울 중구: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 충남 당진시: 임산부 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서비스
    - 이외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통한 돌봄공동체 활성화 정책,
      임산부 구강검진 지원,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및 전문적 상담 지원 등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2. 27):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총 사업비(순지방비) 7.1조원, (전년대비 0.3조원(4.5%) 증가)
- 자체사업: 5,762개 과제
  -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19) 46,779억원 → ('20) 48,789억원(4.3% 증가)
  -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 ('19) 20,080억원 → ('20) 21,323억원(6.2% 증가)
  - ✓ **인구변화 적극대비** : ('19) 964억원 → ('20) 775억원(19.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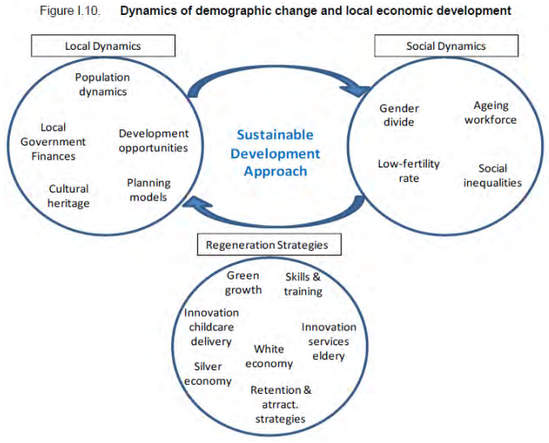
행복충만 충청남도

**자체사업 예산 343, 671백만원 (전년대비 12.9% 증가), 411개 과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 행복키움수당 지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지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
- 임산부 우대금리 예적금, 출생축하금 지원 등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Figure I.10. **Dynamics of demographic chang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 **적응력** (Adaptabiltity)
✓ **의사결정 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 **통합적 접근**
(Integrated Approach)
✓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출처: OECD & LEED (2012). Demographic change and local development: Shrinkage, regeneration, and social dynamics





# II.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강화사업

- ➢ **다산다사 → 소산소사**
- ➢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 진행 및 지방의 중소도시 쇠퇴 가속화**
- ➢ **고령자에 편중된 사회보장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 **결혼 지원정책:** 중매사업, 결혼자금 지원, 구직, 주거 지원 등
- **출산 지원정책:** 분만 지원, 출산축하금 등
- **자녀돌봄(보육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 활성화
-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 **3세 미만 영아를 둔 (전업)주부를 위한 모임 공간(gathering space) 마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 최근의 우선적 지원정책 (priority policy): **Enriching Childcare Support**

- ➢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

##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강화사업

- **소자화 대책에 따른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일본 자치체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결혼에 관한 대응, 풍토조성(機運醸成) 모두 다수 항목에서 작년보다 실시율이 높게 나타남.
- 결혼에 관한 대응, 풍토조성(機運醸成) 모두 「**재원(財源)**」「**인적자원(人的資源)**」**부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남.
  시구정촌의 경우, 「**대응을 위한 조직체제**」 **미흡**도 높게 나타남.
- **교부금 실시에 따른 효과**
  - 신규사업 및 다른 자치체로 시야를 넓히게 된 계기가 됨
  - 도도부현에서 약 절반 이상이 **자주재원(自主財源)으로 사업 지속함**.

출처: 미츠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2020. 3월).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

- 합계특수출생률 상승률이 도도부현(都道府県) 평균을 웃도는 4개 도현에서 각 한 개 모델 자치체 선정
- 결혼・출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변화, 20~30대의 결혼 및 자녀양육 관련 사례조사




### 유형 I : 후쿠이현 후쿠이시
(원래 출산율 수준과 여성취업율이 높은 지역)

- 후쿠이현은 원래 여성취업율이 높으며 맞벌이세대가 전국 1위임.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표: '평균 초혼 연령 낮음', '미혼율 낮음', '약년층(若年層)의 비정규직 비율 낮음', '여성고용자 중 정규직 비율 높음', '근거율(近居率) 높음', '보육시설 이용률 높음', '통근시간 짧음' 등
- 삼세대(三世代) 동거율이 높으며, 최근 핵가족 세대 비율은 증가 추세
- 여성 및 약년층(若年層)의 고용환경이 안정되어 있음.
- 기업에서 양립지원시책을 적극 실시
- **지방행정과 민간이 연계하여 결혼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음.**
  - **지방행정이 단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간 성과가 높음.**





### 유형 II :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출산율 수준 높으나, 여성취업율 낮은 지역)

- '20~34세 여성 미혼자율 낮음', '평균 초혼 연령 낮음', '약년층 비정규직 비율 낮음', '여성 고용자 중 정규직 비율 높음', '근거율(近居率) 높음', '통근시간 짧음'.
- 최근 자녀수가 3명 이상인 30대 부부 비율 증가. 주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3세대 동거보다도 인접거주비율이 높아짐
-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충실(31개 거점)**
- **NPO 법인 등 민간단체 다수 활동.**
  - 자녀양육지원 거점 활동, 방과후 아동 클럽 등 다양한 사업에서 민간단체가 인수 및 운영.
- **근무지와 주거가 가까운 마을 만들기, 약년층 고용환경의 안정** 등 **자녀양육친화 환경과 연결**

### 유형 III : 도쿄도 지요다구
(출산율 수준 낮고, 여성취업율 높은 지역)

- 여성 고용자 중 정규직 비율이 전국평균을 상회.
- ' 아동복지비 높음', '전입 초과율(転入超過率) 높음' .
- '25~34세 여성 미혼율 높음', '평균 초혼 연령 높음', '약년층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 높음', '근거율 낮음', '대기아동 비율 높음', '통근시간 김'
- 지난 10년간 (2005-2015), 도쿄도 남녀 25~34세 미혼율이 낮아져 개선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약년층 고용환경 개선, 청년 정규직 비율 및 임금 수준 상승에 기인함.**
- **최근 인구유입이 계속됨.**
  - 맞벌이 세대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으로서 보육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률 확대, 연장보육 및 석식 제공
- **고교생 의료비 무상화** 등을 전국에서 선구적으로 실시해 옴

## 유형 IV : 나라현 산고초
(출산율 수준 낮고, 여성취업율 낮은 지역)

- 전업주부 비율이 전국 최고임.
  - 최근 5년간(2010-2015) 여성취업율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높은(정적 상관) 지표로서 '남녀 임금 격차 적음',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 높음'.
- '남성 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음', '미혼 여성의 경제력 낮음'이 결혼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임.
-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자녀양육・신혼세대 대상으로 집세 조성 시행 및 전입 증가**.
- **공립 초중 일관교(小中一貫校) 정비 등 차세대 교육 투자**.
- 자녀양육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신생아 전도방문 100%실시**,
  - 최근 **병아(환아)보육사업(病児保育事業)** 등 새로운 시책 실시.
- 인구 규모가 적으므로, **신속한 행정 및 주민과의 관계 중시**

### 일본 시범자치체의 주요 사회환경지표 특징

| 주요 사회환경지표 특장 | 후쿠이현 | 가가와현 | 도쿄도 | 나라현 |
|---|---|---|---|---|
| 1) 완전실업률 낮음 | ○ | | | |
| 2) 청년고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 낮음 | ○ | ○ | | |
| 3) 성인(미혼) 자녀의 부모와 동거율 높음 | ○ | ○ | | ○ |
| 4) 정규직 여성 비율 높음 | ○ | ○ | ○ | |
| 5) 남녀 임금 격차 적음 | ○ | ○ | | ○ |
| 6) 관리직 여성 비율 높음 | ○ | ○ | | |
| 7) 삼세대 동거율 낮음 | | ○ | ○ | ○ |
| 8) 근거율 높음 (이세대 간 근거 비율) | ○ | ○ | | |
| 9) 보육소 이용률 높음(만0~4세) | ○ | | ○ | |
| 10) 대기아동 비율 낮음 | ○ | ○ | | |
| 11) 아동복지비 (만17세 이하 인구 1인당) 높음 | ○ | ○ | ○ | |
| 12) 교육비 공적 부담 높음 (인구 1인당) | ○ | ○ | | |
| 13) 취업(근무) 시간의 낮음 (남성 만25~54세, 1일 근무) | | | | |

주: 지표의 「낮음·높음」에 있어서 합계 특수 출생률 상승률에 대하여 지표 계수가 플러스일 경우 「높음」, 마이너스일 경우「낮음」으로 표기.,
출처 미즈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2020. 3월).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 p 86





## III. 중국 지방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

| | | |
|---|---|---|
| 의료보험 적용비율 상향 조정 | 호북성 함녕 | • 입원 분만 시 의료비를 연 900위안 한도 내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br>• 보조생식기술로 둘째아 출산비용 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 |
| | 호북성 선도 | • 기본출산 무료 및 둘째아 출산 시 1200위안 지원 |
| | 호북성 의창 | • 둘째아 출산 시 기본 출산비를 지역별로 2500위안 기준으로 면제. |
| | 신장자치구 석하자 | • 둘째아를 자연분만 시 세대당 500위안, 제왕절개 시 세대당 1000위안 지원금 제공<br>• 보조생식기술로 둘째아를 출산하는 경우 10,000위안(1회성) 지원 |
| 출산휴가 증대 | 호북성 함녕 | • 둘째아 출산 시 출산휴가 6개월 및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사용 권장. |
| | 신장자치구 석하자 | • 임신 7개월 이상 시 출산 전 휴가를 2.5개월 동안 사용 가능 및 급여를 80% 수준으로 지급 |
| 산부인과, 소아과 역량 강화 | 요녕성 | • 2020년까지 출산용 침상 2000개 중가 및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 3000명 확충. |
| | 섬서성 | •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및 소아과 의사 양성 강화 |
| | 호북성 함녕 | • 산부인과 및 소아과 침상 증가,<br>•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 인재 양성 강화. |
| 탄력근무제 시행 | 요녕성 | • 고용업체가 임신 여성 및 모유 수유 여성에게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공.<br>• 출산 후 업무복귀 지원. |
| | 호북성 함녕 | • 임신 여성 및 3세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의 탄력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신청 가능 |

| | | |
|---|---|---|
| **절차 간소화** | 요녕성 | •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에 대한 심사 허가제 대신 출산 등록제 시행 |
| **출산 확대** | 흑룡강성 | • 국경 지역 부부는 두 자녀를 출산한 후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음. |
| | 섬서성 | • 적기에 전면적인 출산 허용 예정 |
| **보육/유아교육 정책** | 섬서성 | • 0-3세 아동 돌봄 시설 설립조건과 감독관리 정책 및 유치원 확충 |
| | 호북성 함녕 | •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서비스 촉진.<br>• 둘째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육료 감면<br>• 사회자본이 유치원 설립에 참여하도록 권장 |
| **주택 정책** | 호북성 의창 | • 둘째아는 공립유치원 비용 징수 기준으로 보육비 지원금 지급.<br>• 지역별로 인당 1만 위안 이상 지급 |
| | 호북성 함녕 | • 주택구매 지원금 지급(보장성 주택 우선적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






**호북성 효감지역 출산장려 정책**

1. 출산 건강 서비스 강화
2. 모자 손해 보험 가입
3. 출산 보조금 지급
4. 출산 조리기간 연장
5.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
6. 모자시설 건설 추진
7. 탁아소와 유치원시설 건설.
8. 영유아 양육 수당 지급
9. 산모 취업권익 보장
10. 주택보장 강화

http://wjw.xianning.gov.cn/xxgk/wjzl/202004/t20200401_1967142.shtml
호북성 함녕시 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 [전면적 둘째아 맞춤형 정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시  인민정부의 의견] [2018년 공문]





-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목표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 대상**(취약계층, 영아부모 등), **사업의 지속성, 효과성**,
-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 거주자의 인식에 대한 이해와 수요 파악**
  -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성별 역할 분업, 결혼에 대한 인식 등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필요**
- **개별적 선택 존중**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위탁 및 네트워킹 (육아친화공동체 형성)**
- **다양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제대로 알려서 혜택을 누리도록)
- **효과평가 연구 수행 및 데이터 활용 강화**




2020 제6차 환황해포럼

# 감사합니다.

mgmoon@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인구변화추이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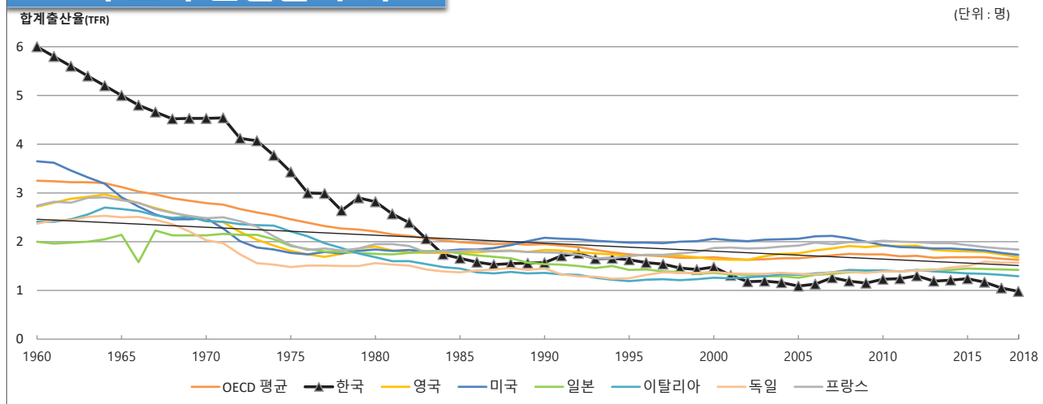
# 인구변화 추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부위원장 서형수

## 주요국 출산율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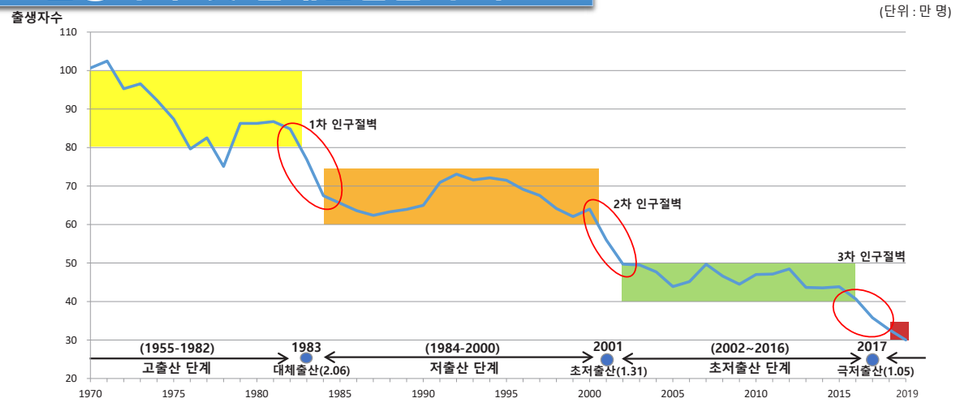

(단위 : 여성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자녀수, 명)

| | 상대적 고출산 (1.9~2.1) | | | | 상대적 중수준 출산 (1.6~1.8) | | | | 상대적 저출산 (1.4 내외) | | | | 초저출산 (1.3미만) |
|---|---|---|---|---|---|---|---|---|---|---|---|---|---|
| 국 가 | 이스라엘 | 멕시코 | 터키 | 프랑스 | 미국 | 호주 | 영국 | 독일 | 폴란드 | 일본 | 그리스 | 이탈리아 | 한국 |
| 합계출산율 | 3.09 | 2.13 | 1.99 | 1.84 | 1.73 | 1.74 | 1.68 | 1.57 | 1.4 | 1.42 | 1.35 | 1.29 | 0.98 |

* 출처 : OECD Familydatabase(2018)

# 출생자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만 명)




(단위 : 만 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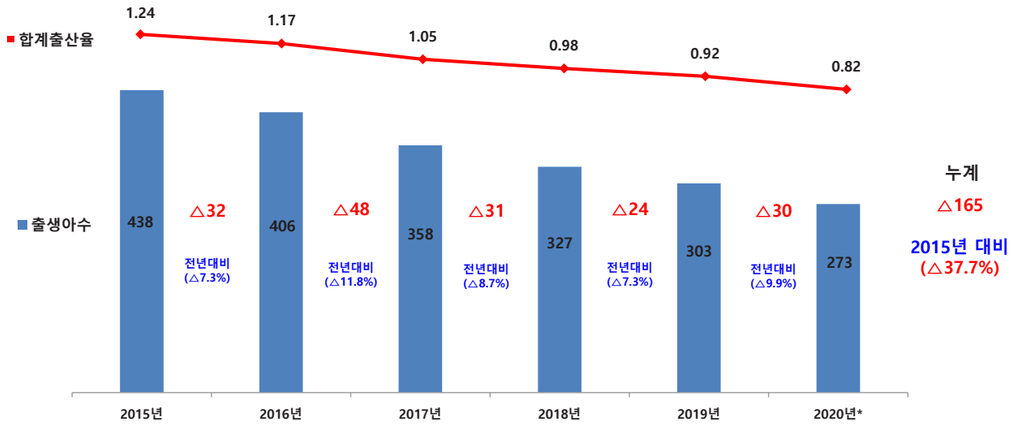
|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19 |
|---|---|---|---|---|---|---|---|---|---|---|---|
| 출생자 | 101 | 87 | 86 | 66 | 65 | 72 | 64 | 45 | 47 | 44 | 30.3 |
| 합계출산율 | 4.53 | 3.43 | 2.82 | 1.66 | 1.57 | 1.63 | 1.48 | 1.09 | 1.23 | 1.24 | 0.92 |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인구동향조사」('19.12.26)



# 최근 5년간 저출생 추이

(단위 : 명,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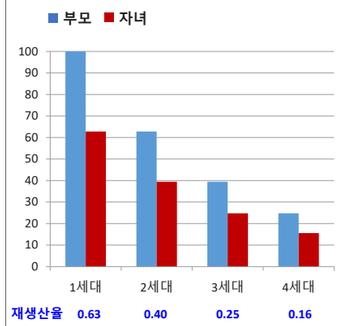

* 상반기 추세를 반영한 추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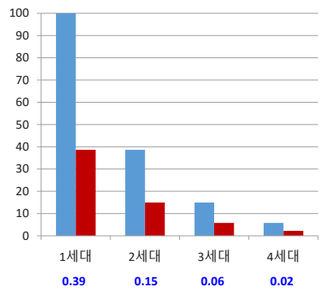
# 세대별 인구변화 시나리오

합계출산율 1.3 / 인구재생산율($\frac{1.3}{2.07}$) = 0.63




재생산율 0.63 0.40 0.25 0.16

합계출산율 0.8 / 인구재생산율($\frac{0.8}{2.07}$) = 0.39




0.39 0.15 0.06 0.02

< 출생아수 시나리오 >

| 구분 | 연도 | 출생아수 (천명) | 재생산율 |
|---|---|---|---|
| | 1990 | **650** | |
| 1세대 | 2020 | **293** | 0.42 |
| 2세대 | 2050 | **114** | 0.42 |
| 3세대 | 2080 | **48** | 0.42 |
| 4세대 | 2110 | **20** | 0.42 |

* 출처 : Peter McDonald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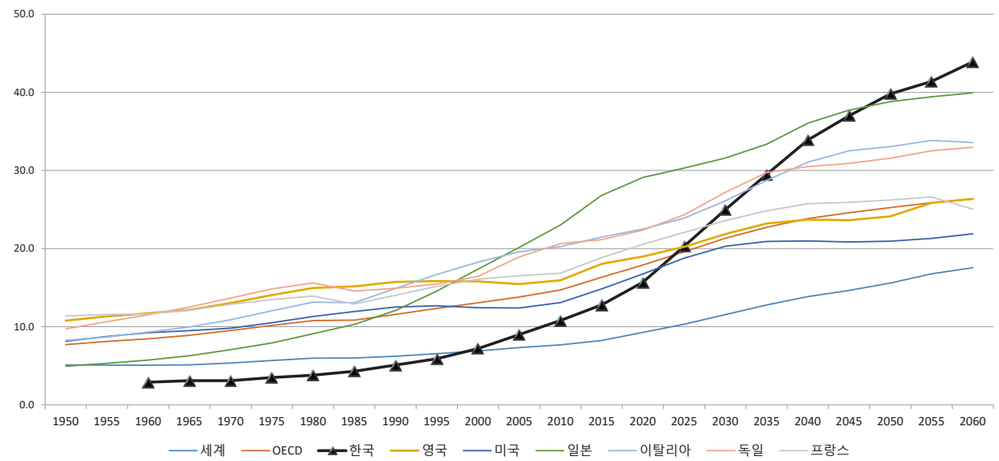
#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 출산과정 (계획된 행동)

| <단계> | <영향원인> | <정책영역> |
|---|---|---|
| 배경 (Background) | (출산과 관련되는)<br>· 사회경제구조<br>· 사회적 규범·가치관<br>· 정부정책 | **사회경제정책**<br>· 교육 · 주택<br>· 산업 · 지역<br>· 고용 · 사회보장 |
| 신념 (Beliefs) | (출산에 대한)<br>· 규범(준거) 해석<br>· 장애(기회) 평가<br>· 태도(선호) 형성 | **가족지원정책** (금전,서비스,시간)<br>· 빈곤방지 · 성평등<br>· 소득지원 · 아동발달<br>· 여성경제활동 · **출산장려** |
| 의향 (Intention) | (출산에 대한)<br>· 현실적 장애(기회) | **출산유인정책**<br>· 결혼·출산(다자녀) 인센티브<br>· 비혼·무자녀 패널티 |
| 행동 (Behavior) | | |

# 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단위 : %)




* 주요국 자료 출처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1950-2050)」 ('20.02.25)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03.27)



# 인구 고령화

(단위 : 만 명, %)

| | 2020년 | <가속기> | 2040년 | <심화기> | 2060년 |
|---|---|---|---|---|---|
| 총인구 | 5,178 | △92 (연 △4.6) | 5,086 | △802 (연 △40.1) | 4,284 |
| 노년인구 | 813 | +909 (연 +45.5) | 1,722 | +160 (연 +8) | 1,882 |
| 생산연령인구 | 3,736 | △ 871 (연 △43.6) | 2,865 | △ 807 (연 △40.4) | 2,058 |
| 유소년인구 | 630 | △ 132 (연 △6.6) | 498 | △ 153 (연 △7.7) | 345 |
| 고령화율 | 15.7 | +18.2p (연 +0.9p) | 33.9 | +10p (연 +0.5p) | 43.9 |
| 노인부양비 | 21.7 | +39.3p (연 +2.0p) | 60.1 | +31.3p (연 +1.6) | 91.4 |

* 출처 :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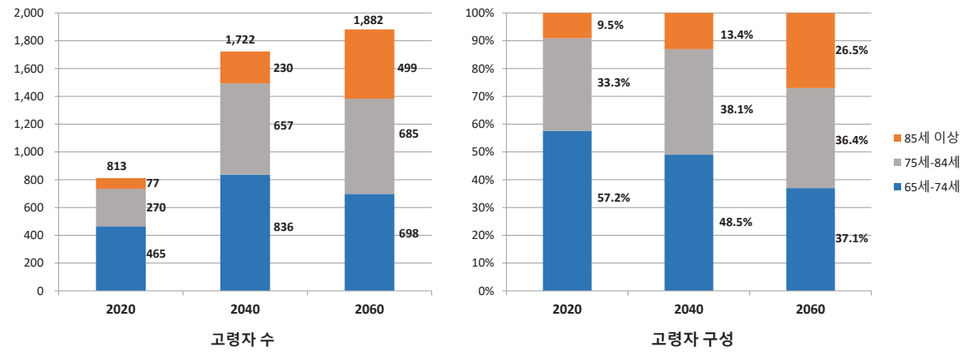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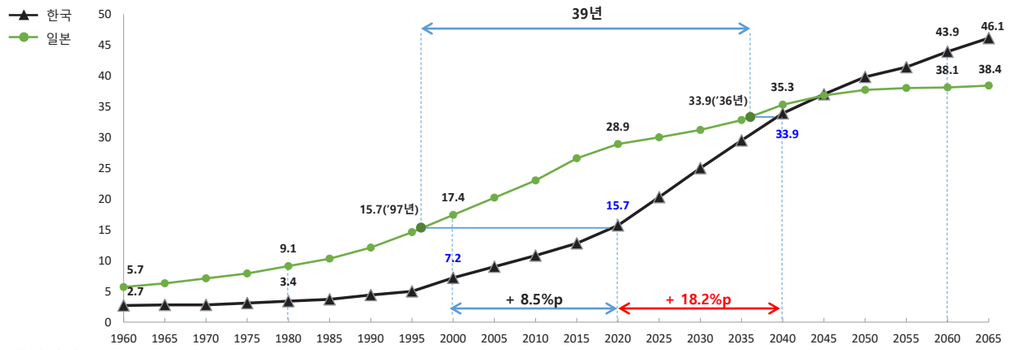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 고령화 추이 한·일간 비교

(단위 : %)

<고령화율>




<중위연령>

| | 1960 | 1973 | 1976 | 1996 | 1997 | 2014 | 2023 | 2031 | 2039 | 2056 | 2065 |
|---|---|---|---|---|---|---|---|---|---|---|---|
| 한국 | (19.0) | (18.9) | 20.0세 | (29.8) | 30.3세 | 40.3세 | (45.5) | 50.1세 | 54.0 | 60.1세 | (62.2) |
| 일본 | (25.6) | 30.0세 | (31.0) | 40.0세 | (40.4) | (46.4) | 50.0세 | (52.6) | 54.0 | (55.3) | (55.7) |

*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03.27)
일본 자료 출처 : 내각부, 「고령사회백서」('19.6월)
일본 중위연령 : 기초통계 5년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1년 단위는 보간법(1차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

# 고령사회 대응 정책

**목표**

· 인구의 질적 재생산 ( * 저출산 대책 : 인구의 양적 재생산 )

· 주 생산층(부양층)의 생산력 ≧ 주 소비층(피부양층)의 소비력

**방안**

A. 주 생산인구층 확대

A-1. 주 생산인구층의 규모 (정년·노인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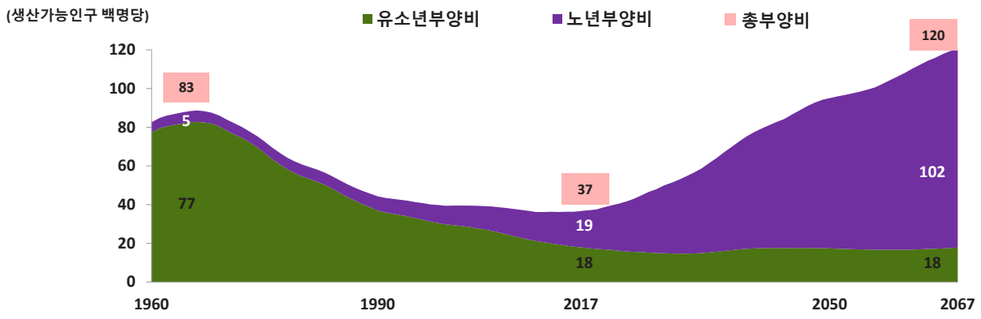
A-2. 주 생산인구층의 고용률 (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B. 주 생산인구층 생산성 제고 (제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

C. 주 소비인구층 소비성 억제 (노인의료비, 장기요양비, 주거비)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5-64세 기준)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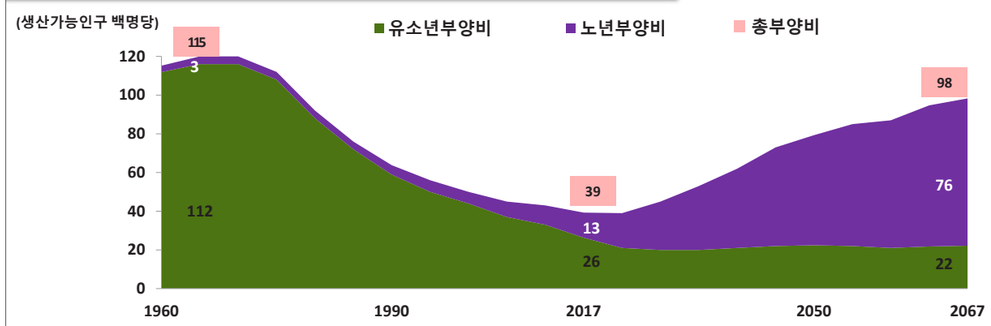
| 구분 | 1960 | 1990 | 2017 | 2050 | 2067 |
|---|---|---|---|---|---|
| 총부양비 | 82.6 | 44.3 | 36.7 | 95.0 | 120.2 |
| 유소년부양비 | 77.3 | 36.9 | 17.9 | 17.4 | 17.8 |
| 노년부양비 | 5.3 | 7.4 | 18.8 | 77.6 | 102.4 |
| 노령화지수 | 6.9 | 20.0 | 105.1 | 447.2 | 574.5 |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20-69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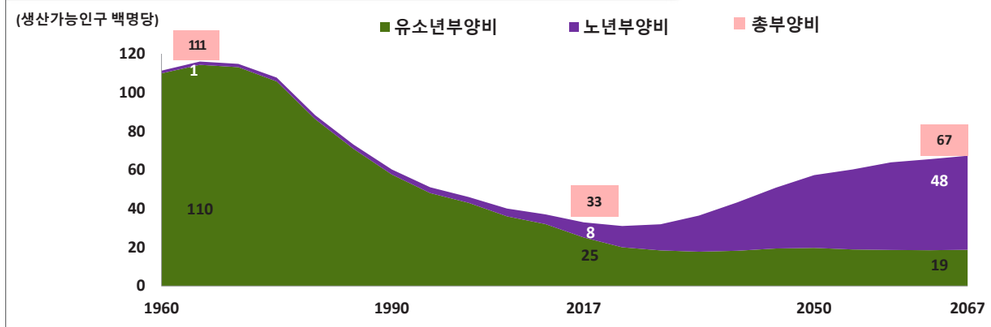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 구분 | 1960 | 1990 | 2017 | 2050 | 2067 |
|---|---|---|---|---|---|
| 총부양비 | 115.1 | 63.9 | 39.3 | 79.3 | 98.3 |
| 유소년부양비 | 111.9 | 58.9 | 26.3 | 22.4 | 22.2 |
| 노년부양비 | 3.3 | 4.9 | 13.0 | 56.9 | 76.1 |
| 노령화지수 | 2.9 | 8.4 | 49.2 | 254.9 | 343.1 |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20-74세 기준)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 구분 | 1960 | 1990 | 2017 | 2050 | 2067 |
|---|---|---|---|---|---|
| 총부양비 | 111.3 | 60.2 | 33.0 | 57.2 | 67.3 |
| 유소년부양비 | 109.9 | 57.6 | 25.1 | 19.7 | 18.7 |
| 노년부양비 | 1.4 | 2.6 | 7.8 | 37.6 | 48.6 |
| 노령화지수 | 1.3 | 4.5 | 31.1 | 191.9 | 259.7 |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본세션 : 번영 2

#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좌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발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

토론 **김동일** 보령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 황해 연안의 바다와 사람, 갯벌을 중심으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장








## 목 차

1. 해양환경 현황 03
2. 해양환경 국내외 정책동향 21
3. 미래전망 환경스캐닝 28
4. 갯벌관리 신제도 34

# 해양환경 현황



## 해양환경 현황

### 일반 현황

#### ☑ 관할해역 면적 및 유·무인도서

-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약 443,838㎢
- 해역별(동-서-남) 평균 수심, 수온 범위, 조석 등 특성 뚜렷
-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14,963㎞ 중 인공해안선은 5,086 ㎞로 약 34%
- 유 · 무인도서 총 3,348개소이며, 이 중 무인도서가 2,878개소로 약 86% (2015년 기준)

#### ☑ 연안습지 (갯벌) 면적 변화

- 연안습지 면적은 2018년 총 2,482㎢로, 1987년 대비 약 22.5% 감소

| 면적 (㎢) | | | | | 변화량 (㎢) | |
|---|---|---|---|---|---|---|
| 1987 | 2003 | 2008 | 2013 | 2018 | 1987-2003 | 2003-2018 |
| 3203.5 | 2,550.2 | 2,489.4 | 2476.8 | 2482.0 | -653.3 | -68.2 |

| 구분 | | 전국 | 인천 |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남 | 부산 |
|---|---|---|---|---|---|---|---|---|---|
| 2013년 | 면적(㎢) | **2,487.2** | 709.6 | 165.9 | 357.0 | 118.2 | 1,044.4 | 68.8 | 23.3 |
| | 구성비(%) | 100.0 | 28.5 | 6.7 | 14.3 | 4.8 | 42.0 | 2.8 | 0.9 |
| 2018년 | 면적(㎢) | **2,482.0** | 728.3 | 167.7 | 338.9 | 110.5 | 1,053.7 | 62.8 | 20.1 |
| | 구성비(%) | 100.0 | 29.3 | 6.8 | 13.7 | 4.4 | 42.5 | 2.5 | 0.8 |



## 해양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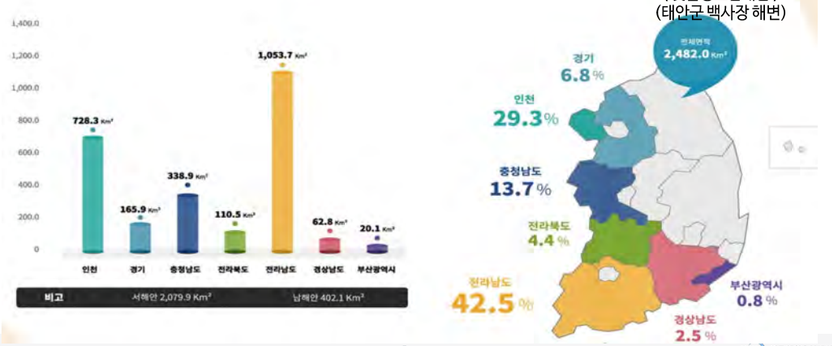
### 일반 현황



#### ☑ 연안습지 (갯벌) 면적 변화

- 기존 5년 단위의 면적 조사 및 갯골 등을 포함한 지형, 지질 조사
- 해양조사원 연안해역 정밀조사 중 갯골분포도의 제도적 근거로 실태조사에 포함
- 2015년 안면도 부근, 2016년 비인만 부근, 2017년 아산만 부근에 대한 선행조사
- 기존 '안전해(海)' 앱 등에 증강현실로 갯골 위치, 조석상황을 표시

〈 갯골정보안내판 〉
(태안군 백사장 해변)






## 해양환경 현황

### 일반 현황

#### ☑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질

- 전국 연안 해수수질은 최근 5년간 WQI I, II등급 비율이 78%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

| 구분 (등급)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 417 | 417 | 425 | 425 | 425 |
| Ⅰ(매우 좋음) | 204 | 205 | 199 | 218 | 222 |
| Ⅱ(좋음) | 123 | 146 | 163 | 130 | 124 |
| Ⅲ(보통) | 74 | 58 | 59 | 59 | 63 |
| Ⅳ(나쁨) | 14 | 8 | 4 | 17 | 12 |
| Ⅴ(아주 나쁨) | 2 | 0 | 0 | 1 | 4 |
| Ⅰ, Ⅱ등급 비율 | 78% | 84% | 85% | 82% | 81%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2019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 우리나라 해양생물종은 총 14,222종으로, 단위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임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
| 해양척추동물 | 1,372 | 1,380 | 1,447 | 1,446 |
| 해양무척추동물 | 5,370 | 5,461 | 5,575 | 5,670 |
| 해양식물 | 992 | 1,011 | 1,045 | 1,045 |
| 해양미소생물 | 5,355 | 5,785 | 5,894 | 5,894 |
| 담수성 수산생물 | 115 | 171 | 170 | 167 |
| 합계 | 13,204 | 13,527 | 13,991 | 14,222 |

자료: 해양수산부, 2020, 「국가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 해양환경 현황



## 갯벌 생태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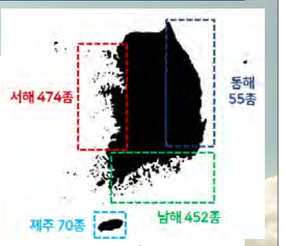
☑ 갯벌 생태계(저서생물)

◆ 2년 단위, 전국 갯벌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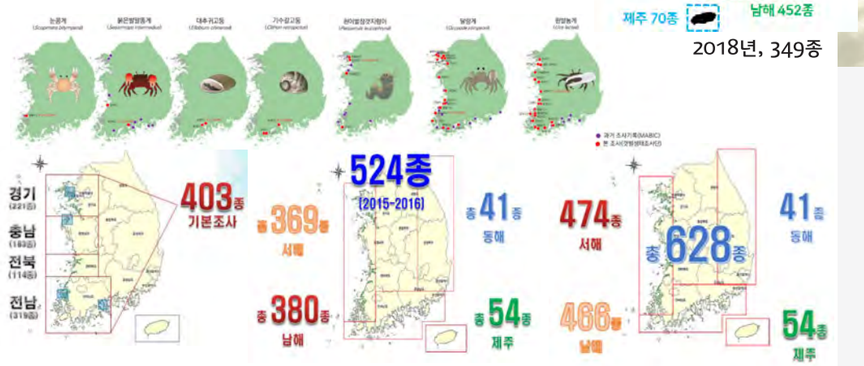
→ 매년 조사에서 350종 이상 최대 600종 이상 확인

◆ 해양보호생물 중 갯벌 서식 생물 출현지역 확인

: 기수갈고둥, 눈콩게,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2018년, 349종




2015년 2015~16년 2017년



# 해양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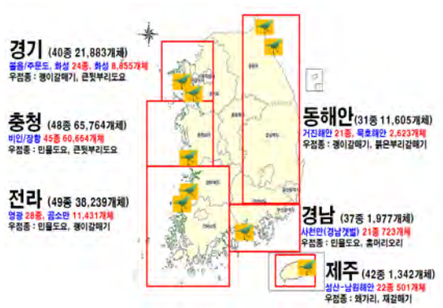
## 갯벌 생태계 현황

☑ 갯벌 생태계(바닷새)

◆ 갯벌이 주 먹이처

→ 매년 조사에서 70여종의 바닷새 출현 확인(77종, 14만 개체, 2017년 기준)

◆ 서해안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게 확인 : 남북 방향의 해안을 따라 다양한 바닷새 출현






2017년







# 해양환경 현황

## 보호구역

☑ 연안·해양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등 연안 · 해양보호구역은 총 30개소 지정, 면적은 1,781.232㎢ (2020년 기준)

| 구분 | 개소 | 면적 (㎢) | 관련 법령 |
|---|---|---|---|
| 습지보호지역 | 13 | 1,421.59 | 습지보전법 제8조 |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14 | 261.27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해양생물보호구역 | 2 | 94.1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해양경관보호구역 | 1 | 5.2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계 | 30 | 1,781.232 | |

- 충남권역 : 가로림만, 신두리사구, 보령소황사구, 서천갯벌 등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이용 현황

☑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현황

- 공유수면 매립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
- 면허 건수(831건, '18기준) 대비 준공건수(489건, '18기준)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립 진행 예상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건수는 총 27,128건이며, 면적은 약 24,158㎢(2017년 기준)

☑ 해수욕장

- 총 288개소의 해수욕장 지정(2018년 기준), 연간 이용객 수는 총 8,228만 명 상회

☑ 해양오염사고

- 2009~2018년 기간 동안 연간 250건 이상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수 | 287 | 329 | 287 | 253 | 252 | 215 | 250 | 264 | 271 | 288 |
| 유출량(㎘) | 110.8 | 601 | 369 | 418.7 | 635 | 2001.4 | 464.1 | 277.7 | 229.9 | 250.9 |

자료: 해양경찰청, 「2019 해양경찰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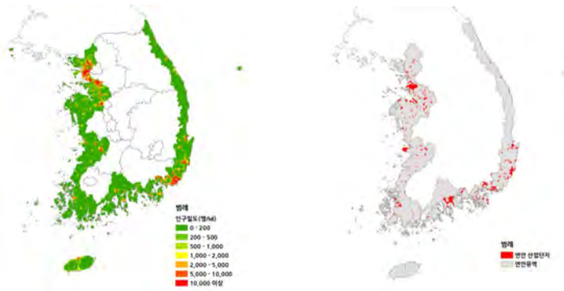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인구 현황

### ☑ 연안 인구 분포 및 개발 현황

- 연안유역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47.1% (2018년 기준)
- 인구밀도는 620명/㎢으로 전국 평균 529명/㎢을 상회
- 국가산업단지의 약 73%가 연안에 위치 (2019년 기준)

| 구분 | 합계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
|---|---|---|---|---|---|
| 전국 | 1,272 | 64 | 708 | 26 | 474 |
| 연안 | 639 | 47 | 394 | 13 | 1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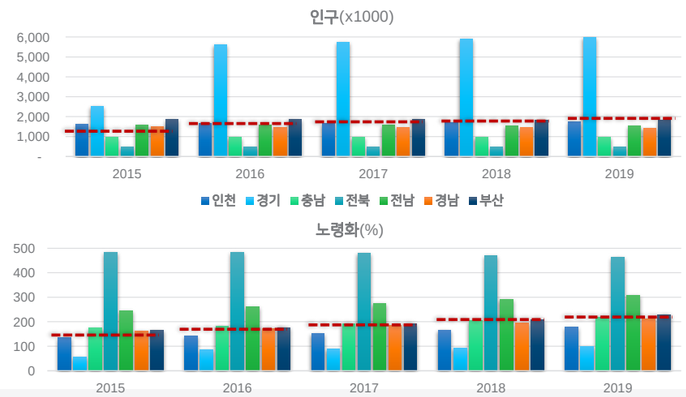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인구 현황

### ☑ 연안 인구 분포 및 개발 현황

- 갯벌을 포함하는 지역 인구의 증가는 경기도(연평균 24%)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 변화 없음
- 나머지 지역의 인구 변화 정도는 매우 작음(연평균 -0.2%)
- 노령화는 인구와 반대 경향을 나타내며 증가추세(연평균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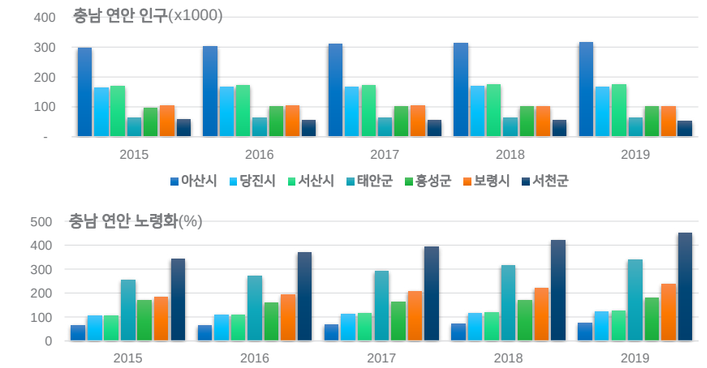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인구 현황

### ☑ 연안 인구 분포 및 개발 현황

- (예시) 충남의 시군 인구는 최근 5년간 거의 변화 없으나 (연평균 0.2%)
- 노령화는 계속 증가 추세(연평균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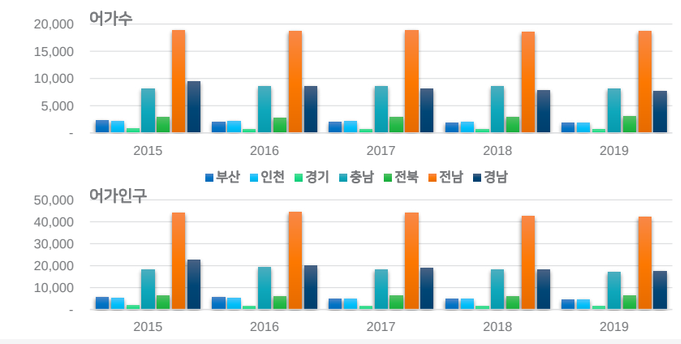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인구 현황

### ☑ 어가수 및 어가 인구

- 갯벌을 포함하는 지역 어가수는 감소추세(연평균 -2.8%)
  : 경기의 어가 감소율이 가장 큼(연평균 -6.6%)
- 어가 인구도 모든 지역에서 감소추세(연평균 -3.7%)
  : 경기의 어가인구 감소율이 가장 큼(연평균 -7.6%)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어가/어가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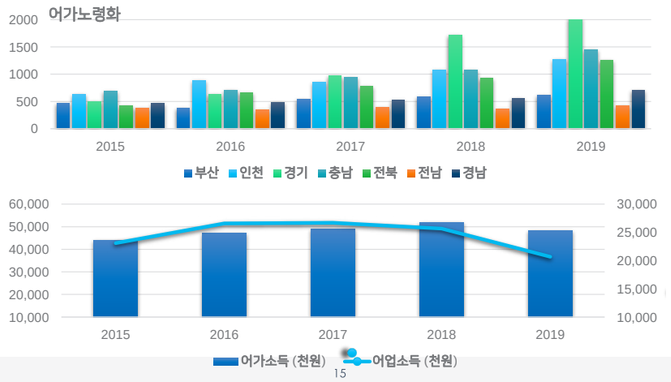
☑ 어가수 및 어가 소득

- 어가노령화는 어가 인구가 많은 충남, 전북, 경남의 증가율이 매우 높음(연평균 21.1%)

  : 연안인구에서 고령화가 낮았던 경기는 어가고령화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임(연평균 42.4%)

- 전국 어가 소득은 증가(연평균 2.5%)하는 반면 어업소득은 감소추세(연평균 -2.7%)

  : 2019년 어업소득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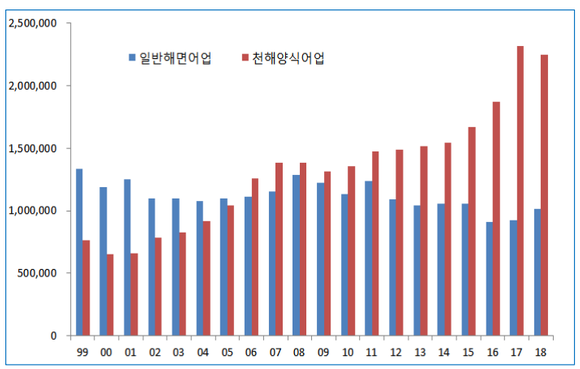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어업 생산량

☑ 양식어업 vs. 해면어업

- 최근 20년간('99~'18년)의 일반해면어업과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
- '05년도를 기점으로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을 추월
- '18년에는 2배 이상의 차이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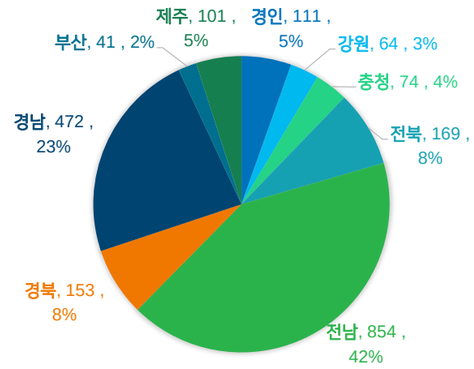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시도별 어촌계

☑ 어촌계

- 전국에 2,039개 어촌계 분포

  전남(854) > 경남(472) > 전북(169) > 경북(153) > 경인(111) > 제주(101) 순




지역별 어촌계수 비중('18년 기준)



# 해양환경 이용 현황

## 시도별 어촌계

☑ 어촌계

- [어촌계현황] '18년 기준 총 126,461명 어촌계원수 포함
- 2006년 기준, 최근까지 총 30,656명 감소
- 연평균 증감률은 경인지역이 최대, 계원수 측면에서는 전남이 최대
- 충남의 경우 어촌계수는 적으나(4%) 어촌계원수는 2배 이상(10.8%)

| | 어촌계 | | 계원수 | | 계원수/어촌계 |
|---|---|---|---|---|---|
| 경인 | 111 | 5.4% | 9,417 | 7.4% | 84.8 |
| 강원 | 64 | 3.1% | 4,188 | 3.3% | 65.4 |
| **충청** | 74 | 3.6% | 13,625 | 10.8% | 184.1 |
| 전북 | 169 | 8.3% | 6,861 | 5.4% | 40.6 |
| 전남 | 854 | 41.9% | 49,994 | 39.5% | 58.5 |
| 경북 | 153 | 7.5% | 6,358 | 5.0% | 41.6 |
| 경남 | 472 | 23.1% | 22,345 | 17.7% | 47.3 |
| 부산 | 41 | 2.0% | 2,837 | 2.2% | 69.2 |
| 제주 | 101 | 5.0% | 10,836 | 8.6% | 107.3 |
| 계 | 2039 | 100.0% | 126,461 | 100.0% | |

| 지역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연평균 증감률(%) |
|---|---|---|---|---|---|---|---|---|---|---|---|---|---|---|
| 경인 | 13,870 | 10,988 | 10,057 | 10,252 | 10,402 | 10,363 | 9,697 | 9,778 | 10,113 | 9,900 | 9,875 | 9,565 | 9,417 | -3.2% |
| 강원 | 5,750 | 5,786 | 5,705 | 5,311 | 5,312 | 5,399 | 5,326 | 5,132 | 5,342 | 5,039 | 4,493 | 4,337 | 4,188 | -2.6% |
| **충청** | 12,070 | 12,427 | 12,979 | 14,004 | 13,506 | 13,447 | 15,070 | 14,908 | 15,474 | 15,362 | 15,376 | 15,259 | 13,625 | 1.0% |
| 전북 | 6,575 | 6,976 | 6,532 | 9,419 | 6,992 | 7,811 | 7,601 | 6,952 | 6,758 | 6,746 | 6,372 | 6,734 | 6,861 | 0.4% |
| 전남 | 63,853 | 62,468 | 59,952 | 57,512 | 48,401 | 54,152 | 53,199 | 54,211 | 53,784 | 51,622 | 51,753 | 50,760 | 49,994 | -2.0% |
| 경북 | 8,586 | 8,396 | 8,083 | 8,149 | 8,028 | 7,709 | 7,684 | 7,745 | 7,330 | 7,306 | 6,553 | 6,754 | 6,358 | -2.5% |
| 경남 | 29,191 | 28,854 | 28,974 | 29,468 | 28,980 | 26,484 | 26,959 | 25,503 | 26,282 | 27,045 | 24,044 | 22,751 | 22,345 | -2.2% |
| 부산 | 3,569 | 3,489 | 3,459 | 3,451 | 3,457 | 3,514 | 3,309 | 3,303 | 3,500 | 3,456 | 3,049 | 2,992 | 2,837 | -1.9% |
| 제주 | 13,653 | 13,339 | 13,252 | 13,619 | 12,592 | 12,835 | 12,726 | 11,939 | 12,456 | 11,579 | 11,475 | 11,965 | 10,836 | -1.9% |
| 계 | 157,117 | 152,723 | 148,993 | 151,185 | 137,670 | 141,714 | 141,571 | 139,471 | 141,039 | 138,055 | 132,990 | 131,117 | 126,461 | -1.8% |

# 갯벌/연안 관련 축제

◆ 전국 968개 축제 중 연안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는 294건

→ 갯벌이 포함된 축제는 17건

**지역축제 현황**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총계 | 968 | 81 | 45 | 38 | 19 | 8 | 8 | 23 | 2 | 110 | 97 | 40 | 98 | 57 | 122 | 86 | 95 | 39 |



<갯벌 관광 현황파악을 위한 DATA SET>





# 갯벌/연안 관련 축제

| 지역 | 경기 | 충남 | | | | | | | | | 전북 | | 전남 | | | | |
|---|---|---|---|---|---|---|---|---|---|---|---|---|---|---|---|---|---|
| 축제명 | 시흥 갯골축제 | 무창포 주꾸미, 도다리 축제 | 보령 머드축제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 지곡 왕산포 서산갯벌 마을축제 |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 한진 바지락 축제 | 홍성 남당항새 조개축제 |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 서천 철새 여행 |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 바지락 오감만족 페스티벌 | 고창 갯벌축제 |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 순천만 봄 생태 문화제 | 순천만 갈대축제 | 황토 갯벌축제 | 낙지축제 |
| 방문객 수 | 120000 | 10000 | 1831000 | 31000 | 15000 | 15000 | 8000 | | | 40000 | 361000 | 26000 | 94000 | 14500 | 25000 | 181000 | 84000 | 10000 |











# 해양환경 국내외 정책 동향과 전망

# 국내외 주요계획 및 동향 분석 해양수질환경 분야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발원지에서 하구 연안까지 자연과 상생하는 건강한 물순환
- 유역통합관리, 사전예방적 비점오염원관리, 하구 관리 부처 협업육상의 관리물질TOC 변경에 따른 해역 분야의 대응 필요
- 안전한 물환경 : 감시물질, TOC 중심, 업종특성 고려, 녹조 관리, 기후 취약시설
- 유역통합관리 차원에서 해역에 대한 고려 미미, 해양수산부 주도의 해양수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필요, 육상수질 정책과 해양수질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의 등장, 연안지역 염해 피해 등으로 확대 要

**미국 TMLDL 오염총량관리**

- 대장균 지표 외에 최근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분변의 기원 등을 구분하는 등 신기술의 활발한 도입과 적용
- 오염물질별, 해역의 용도별로 기준 설정이 가능한 체계
- 지역중심의 해양환경 관리의 필요성과 지자체 또는 지방청의 역할 강화 필요
-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역량, 관리구역 등 확대

**호주 Framework for marine and esturarine water quality protection**

- 이해관계자 협의, 우려되는 수역과 유역 관리를 위한 오염
- 국가수질관리전략 내 담수와 해수를 통합적으로 관리, 계획 수립부터 정부부처 참여와 업무분장, 협업체계 마련
- 물의 환경적 가치와 오염원인, 압력요인 분석 등 본질적인 접근

# 국내외 주요계획 및 동향 분석 해양생태계 분야

| | |
|---|---|
| **2차 해양생태계 기본계획 (`19~`28)** | • 서식지 보호, 생물보호 · 복원, 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제시<br>• 해양생태축 개념을 적용,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계획 상 생태축 개념과의 연계성 검토 要<br>→해양생태축과 연계한 도시화 작업 필요 |
| **NOAA Fisheries/ Habitat Enterprise Strategic Plan (`16~`20)** | •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속적 어업, 보호종 복원, 연안생태계 및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목표<br>• 회유성 어종의 이동 장애 해결, 산호초 우선 보전, 습지의 복원(1만 에이커), 심해저 서식지 보존, 암반서식지 보호 · 복원, 수생식물(해중림, 잘피 등 현황 파악) 순손실 방지<br>• 유류피해에 따른 자원피해평가 및 복원 계획, 서식지중점지역을 대상으로 관리모델 확보, 경관보전 파트너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참여, 파트너십 강화, 서식지 조사 개선 등 제시<br>• 공통이슈(cross-cutting)를 하나의 공통전략으로 설정 |
| **미국 캘리포니아주** Strategic Plan to Protect California's Coast and Ocean for 2020-2025 | • 해수면 상승(3.5ft) 대비(해변 감소), 습지 복원, 해수산성화, 저산소층 대비, MPA 모니터링, 고래 · 바다거북 선박 충돌, 흔획 폐사율 제로화, 해양쓰레기 유입 제로화, 유해 적조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예측 |



# 미래 전망과 해양환경 이슈 도출

환경 스캐닝 STEEP 프레임워크 도출 · 활용 절차

01 STEEP 문헌연구 — KMI 연구진
02 STEEP 초안 작업 — 연구진 워크숍(05.28) 참석자 전원
03 STEEP 최종(안) 도출 — KMI 연구진
04 5차 계획 부문별 전략·과제 도출에 활용 — KMI 연구진

| 구분 | 미래 트렌드 | STEEP 공동작업 |
|---|---|---|
| Social | ▪ 인구구조의 지역 간 격차 심화<br>▪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대 |  |
| Technological | ▪ ICT 기술 혁신<br>▪ 생명의료, 로봇,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발전 | |
| Economic | ▪ 소득·세대·지역 격차 심화<br>▪ 신산업 등 새로운 경제 동력의 등장 | |
| Environmental |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br>▪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지속적 증가 | |
| Political | ▪ 시민의 정치 참여와 지방분권화 수요 증가<br>▪ 동북아 및 글로벌 정치경제 역학 변화 | |







# 미래 전망과 해양환경 이슈

사회 (Social)

| 사회(S) 분야 미래 전망 | | 사회(S) 분야 해양환경 변화 전망 | 해양환경관리의 방향성 |
|---|---|---|---|
| 인구구조의 지역 간 공간격차 심화 | 출산율 저하, 고령인구 비율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발생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영향과 어촌 경제 격차 심화 | 해양환경관리 및 어촌 활성화를 위해 자동화 신기술 활용 증대 |
| | 수도권과 농촌·어촌지역의 인구구조 공간격차 심화 | 연안지역의 인구감소로 자치 거버넌스 약화 | 연안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적 자본 증대 |
| | 수년간 국내·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우려 증가 | 감염병에 의해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감염병과 환경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대 | 1인 가구 증가로 개인화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 소비패턴 변화에 의해 해양환경 영향 증가 | 친환경적 소비패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 | 고령화 사회를 '문제'가 아닌 '기회' 요소로 인식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연안·해양자원을 활용한 여가활동 증대 | 연안·해양자원의 보전 및 개발의 균형적 정책 수립 |



# 미래 전망과 해양환경 이슈

기술 (Technological)

| 기술(T) 분야 미래 전망 | | 기술(T) 분야 해양환경 변화 전망 | 해양환경관리의 방향성 |
|---|---|---|---|
| ICT 기술 혁신 | 정보의 생산-소비 주체 확대 | 시민참여 기반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계 | 해양환경 조사·관측 기법의 기술적 개방성 고려 |
| | 빅데이터 시대 본격 도래 | 해양환경정보 빅데이터화와 지능형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확대 | 해양환경정보의 생산과 활용 방식 변화 |
| | 스마트 시대로의 사회 발전 | ICT, 빅데이터 활용 해양환경산업 발달 | 해양환경관리에 환경정보 활용성 증대 |
| 생명의료, 로봇, 자율주행 신기술 확대 | 융합-신산업 발달 | 무인, 자동화 기반 해양환경 탐사 | 새로운 해양환경 리스크 인식과 대응 능력 제고 |
| | 무인, 가상물리, 자동화 확대 | 신기술, 기술 융복합형 해양환경산업 성장 | |
| | | 신물질, 신기술에 따른 해양환경 신규 리스크 증가 | |

## 미래 전망과 해양환경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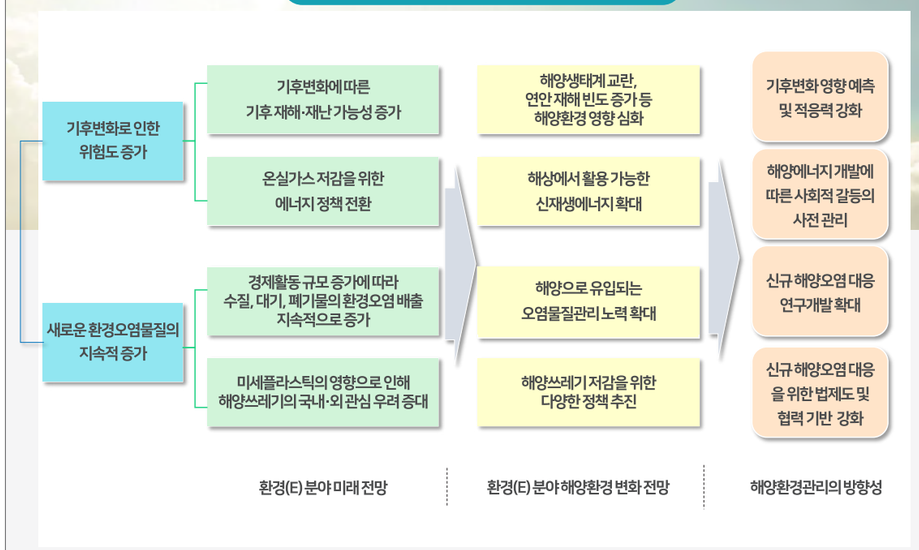
### 경제 (Economic)






## 미래 전망과 해양환경 이슈

### 환경 (Environm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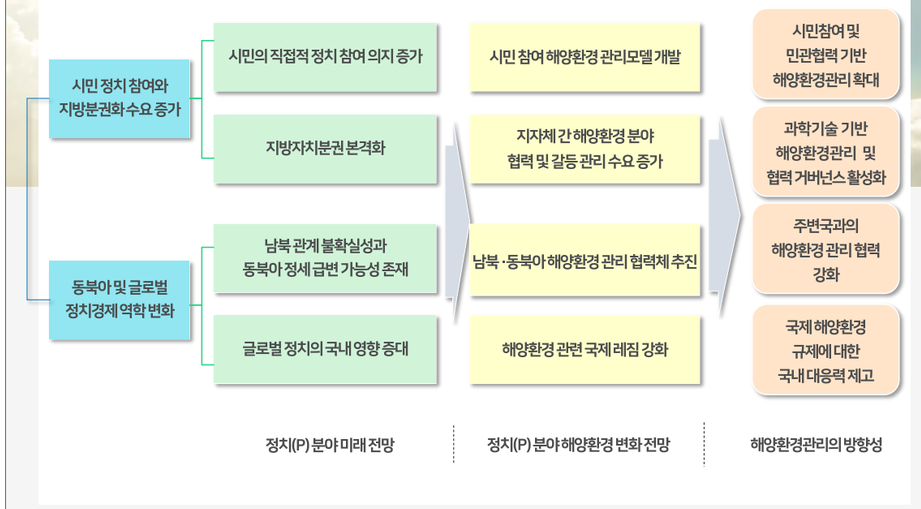







## 미래 전망과 해양환경 이슈

### 정치 (Political)






# 청정갯벌 지정 제도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청정갯벌의 개념

-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법 제2조제4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법 제1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14조제2항).
- 갯벌생산구역: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법 제10조제2항제4호)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청정갯벌의 개념 요소

01 건강성
-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02 안전성
-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



03 생산성
- 생물자원의 생산 증대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도입 목적 및 필요성

- (도입 목적) 청정갯벌 지정을 통한 명품 갯벌의 브랜드화
  - 갯벌생산구역 중 특정지역을 청정갯벌로 국가가 지정
  →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및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 기반 확보, 생물자원의 생산성 증대

∴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갯벌의 청정도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 마련
→ 지역 브랜드와 수산물의 가치를 제고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도입 목적 및 필요성

- (필요성) 안전성 중심의 기존 수산물 관련 인증 제도 한계
  - 국내 수산물 인증제도는 대부분 ‘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증
  → ‘생산지’에 대한 안전성과 청정도에 관한 정보 제공 부족

대표적 수산물 인증제 : 수산물 품질인증제, 무항생제 등 인증제, 지리적 표시제, 수산물이력제
















FDA 지정해역 :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 등 수산물 생산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해역의 청정도를 점검

※ 美 FDA 담당자가 매년 방문 → 해역 내 오폐수 유입, 항생제 사용 여부 등 위생상태를 점검
: 점검 이후 해당 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수출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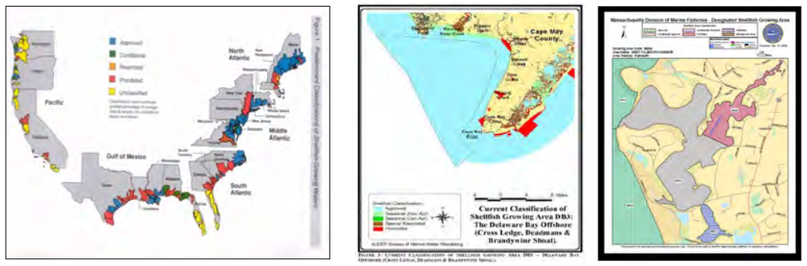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패류생산해역

◆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미국의 패류위생관리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 (역사)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패류의 생산해역, 수확, 가공 및 유통 과정 중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의 역사
- (정의) 패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식, 수확, 가공, 정화, 운송 등 전반에 대한 관리 규정
- (해역 분류) 위생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활용 가능한 모든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역을 분류
  - 허가해역, 조건부 허가해역, 제한해역, 조건부 제한해역, 금지해역으로 구분









자료 : 유홍식,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청정갯벌 전문가자문회의자료, 2020, p.5-p.12

35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청정갯벌의 관리

◆ **청정갯벌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된 청정갯벌을 함께 관리**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관에게 통보**

영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2. 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3. 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4. 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7



# 청정갯벌 제도의 의의

## 패류생산해역

◆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 육상에서 기인한 오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환경조건임을 확인 : 수하식 굴 중심의 관리

◆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되는 갯벌수산물에 대한 관리로 발전 필요 : '청정갯벌'

<패류생산해역 주변 육상오염원영향 평가 사례 : 한산거제만해역(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 1호)>

해안선 오염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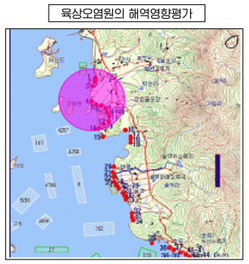
- 해역주변에 위치한 직간접오염원의 확인 및 평가
  -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MSC, 유량, 수온 등

상류 육상오염원 조사



- 해역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의 오염원인 파악
  -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MSC, 유량, 수온 등

육상오염원의 해역영향평가



- 오염원의 평가
  - 오염원의 배출 유량 측정
  - 분변계대장균 실험
  - 분변계대장균의 1일 부하량 계산
  - 해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평가

36



# 갯벌 복원

## 갯벌복원 사업 유형

| 유형명 | ① 특화사업 | ② 공통사업 | ③ 타부처 연계사업 |
|---|---|---|---|
| **해수소통형**<br>※ 연륙도로 등의 구조물로 단절되어 해수소통이 저해되는 갯벌 | 노두(길) 철거<br>연륙도로 철거<br>폐방조제 철거 | **해수소통 구조물 설치**<br>교량, 암거 등<br>※ 기존구조물 기능유지 필요시<br>**호안구조물 설치**<br>※ 신규 해안선이 필요한 경우<br>**갯벌 토공**<br>갯골 설치<br>지반경사 조정<br>**배수시설 설치**<br>※기존배수관이설이필요한경우<br>**안전시설 설치**<br>표지판, CCTV 등<br>**친수시설 설치**<br>휴식공간, 갯벌 접근용 계단<br>친수데크 설치<br>탐조대 설치<br>생태관측대 설치<br>※ 체험구역 등 계획 수립 시<br>**편의시설**<br>화장실 등<br>**방문객센터 설치** | 염생식물 식생(수산실)<br>수생식물 식생(수산실)<br>종패 및 모래살포(수산실)<br>주차장 조성(국토부)<br>상징 조형물 설치(문체부)<br>오토캠핑장 조성(문체부)<br>마을 박물관 건립(문체부)<br>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환경부)<br>노후 상수도 정비(환경부)<br>도서개발(행안부) |
| **갯벌재생형**<br>※ 폐염전 등 과거 갯벌이었던 지역의 복원 | 폐염전 복원<br>폐양식장 복원<br>방치및폐농지복원<br>육화 구역 복원 | | |
| **기능개선형**<br>※수질, 퇴적, 주변 폐기물 등 오염으로 인해 갯벌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복원 | 하구복원<br>어장진입로 철거<br>오염물질 제거 | | |
| **경관개선형**<br>※ 주변경관이 수려하거나 관광지로서 기능이 필요한 지역의 복원 | 염색식물 군락 조성<br>연안구조물 제거 | | |

39



## 갯벌복원 사업 유형(해수소통형)




40





## 갯벌복원 사업 유형(갯벌재생형)




41



## 갯벌복원 사업 유형(기능개선형)




42

# 갯벌복원 사업 유형(경관개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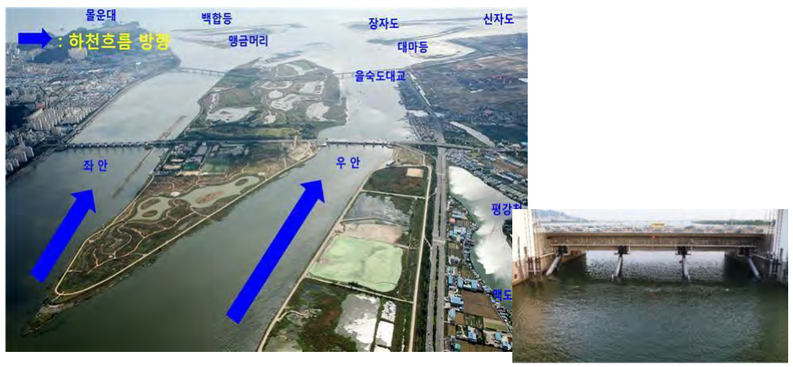





# 갯벌복원 사업 유형(역간척 또는 하굿둑 개방)

## 낙동강 하굿둑 시범 개방

- 해수 유입 후 지하수 수위의 변화, 염수의 지하수 침투에 따른 염해 우려 검증 중






낙동강 하굿둑 모습. 을숙도를 중심으로 '좌안'에 10문, '우안'에 5문의 배수문이 설치돼 있다. 환경부 제공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6866.html#csidx35309acd9b03488bd9abfec50c3ed61







# 갯벌복원 사업 유형(역간척 또는 하굿둑 개방)

## 부남호





좌측이 바다, 우측이 부남호
http://www.hani.co.kr/arti/PRINT/869975.html

좌)1984년, 우)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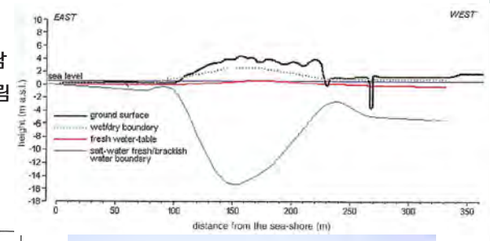
- 부남호 역시 해수에 의한 염해 피해 발생
- 간척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 大
- 토지를 공유수면으로 전환해서 얻는 편익의 비교 ➔ 재정당국에 대한 설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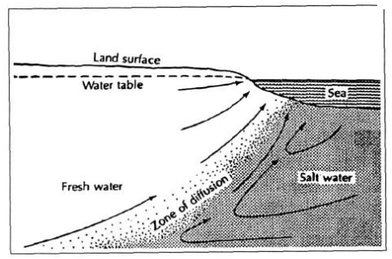


# 갯벌복원 사업 유형(역간척 또는 하굿둑 개방)

## 해안사구와 담수렌즈 활용

- 간척지 토지의 일부만 갯벌로 전환
- 해안사구 조성 → 염지하수 유입 방지를 위한 담수렌즈 형성 → 배후지 염해 피해 감소 → 해안림 식재 등으로 연안경관 개선






# 갯벌생태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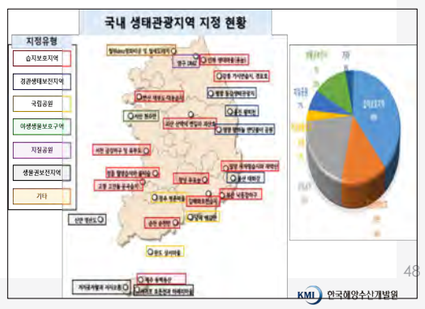
## 갯벌생태관광

### 생태관광정책과 정책사업

◆ 생태관광

• 2013년「자연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생태관광 개념 정의 및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 생태관광협회 설립

- 생태관광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 생태관광육성/생태관광지역 :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생태관광지역) : 2019년 26개소 지정
- 지원사항 : 지역주민 협의체 육성, 주민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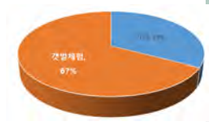



## 갯벌생태관광

### 갯벌생태관광 관련 마을 사업(관광/휴양)

◆ 어촌체험휴양마을

- 어촌지역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어업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 (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2001년 시범사업 시작 후, 2020년 현재 전국 104개소의 어촌체험마을을 지정 및 운영 중
- 마을단위(어촌계)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서/남해안권 지역 갯벌체험 중심)
- 2018년 체험마을 방문객 145만명 규모, 2018년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 중 67%가 갯벌체험프로그램 운영
- 갯벌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마을은 수산물 채집/시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 이를 해양생태자원 교육/환경보전으로 전환 필요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촌관광사업 등급제 도입









## 갯벌생태관광

###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방향

• 생태관광 도입 취지와 연계하여 어업/어촌체험에서 벗어나 해양생태자원에 대한 소개/환경보전 필요성 강조




◆ 갯벌생태관광인증제도

• 인증제도 도입 목적
- 갯벌자원에 대한 관광, 휴양가치 제고와 더불어 무분별하고 파괴적인 방식의 갯벌 체험과 탐방 예
- 인증된 갯벌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
-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갯벌의 생태를 이해하고 배우는 우수 프로그램을 국민에 제공

• 인증대상의 설정
- 갯벌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갯벌생태관광상품(체험프로그램+탐방프로그램) 운영 주체

## 갯벌생태관광




###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 갯벌생태관광인증 지침 주요내용

- (인증 대상) 갯벌생태관광을 테마로 체험·탐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민이 해설자로서 참여하는 구체화 된 관광상품
- (인증 기준) 생태관광의 원칙에 따라 ⅰ) 갯벌생태계 보전 여부(환경), ⅱ) 지역민의 참여 정도(사회), ⅲ) 지역의 지속가능성(경제)에 따라 세부기준 적용
- (인증위원회)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 (지원) 법제27조제5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
  - 교육시설 및 교보재 지원, 갯벌생태관광 인증 홍보, 갯벌생태해설사 고용 지원
- (운영) 초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인증(용역사업을 통해 운영 지원), 향후 위탁 규정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또는 협회)에 위탁하여 인증



# 동북아 해역 내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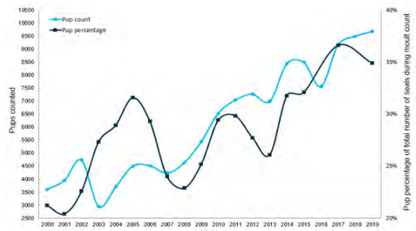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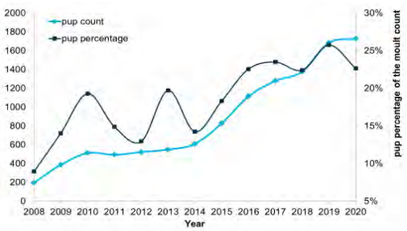
## 동북아시아 해양보호생물 보전 협력체 구성

사례 : 바덴해 바다표범 보존협정(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Seals in the Wadden Sea)

- **배경 :** 바덴해 서식 바다표범은 물개 전염성 급성염증 바이러스(PDV) 발생으로 개체수가 1988년 60%, 2002년 47% 급격히 감소
- **개요 :** 바덴해 연안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네덜란드-독일-덴마크 3개국은 바덴해 지역의 바다표범 보존 장려를 목적으로 3자 지역협정 체결('90.10.16.), 발효('91)
- **내용 :** 당사국은 바덴해 바다표범 보존 및 관리 계획 수립(제4조), 바다표범 연구 및 모니터링 수행(제5조), 포획금지 조치 시행(제6조), 서식지 보호(제7조) 및 오염원 관리(제8조) 의무를 지님
  - 바다표범 개체수 보존 및 관리계획(Seal Management Plan 2018-2022)은 1991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 및 이행
  - 3개국은 매년 Harbour seal과 Grey seal을 대상으로 개체수 변화 추이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그림] 2000~2019 관찰된 Harbour seal 어린개체수 추이




[그림] 2008~2020 관찰된 Grey seal 어린개체수 추이



## 동북아시아 해양보호생물 보전 협력체 구성

사례 ; 1911년 북태평양 물개보호조약(North Pacific Fur Seal Convention of 1911)

- **배경 :** 1786년 유럽인들이 물개를 처음 발견, 이후 포획 대상이 되어 약재와 모피로 유통됨
  *모피는 방한용, 장식용으로 애용되고, 해구신(海狗腎)이라 불리는 수컷 생식기는 신체허약, 양기부족 등에 좋다고 알려짐.
  19세기 중엽, 남획으로 인해 물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멸종위기 상태에 처함
- **개요 :** 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은 야생동물보전 관련 최초 조약인 물개보호조약을 체결(1911.7.7),
  (해당 조약은 15년 시한 조역으로 1925년 소멸)
- **내용 :** 이 조약은 원양 물개사냥을 금지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육상에서의 물개 사냥 관리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인정함. 대신 그 외 조약 서명국들은 특정 조건에 따라 지불 또는 최소한의 물개 모피를 보장 받음.
  -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상업적 목적으로 물개 사냥을 하는 원주민에게는 예외



[그림] 원양 물개사냥하는 모습

[그림] 물개 서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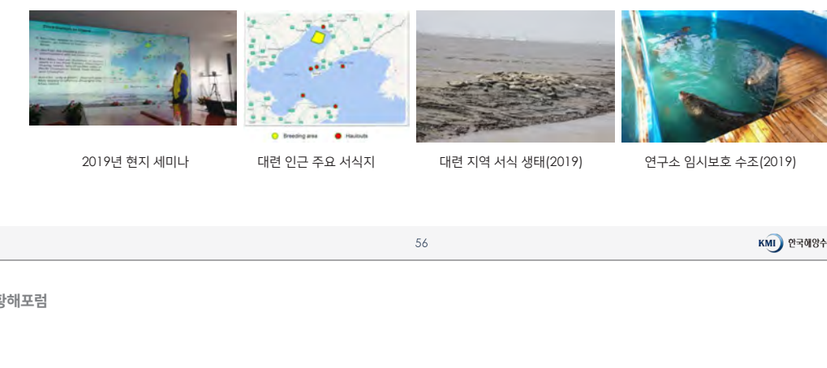


태평양 북위 30도선에서 원양 물개사냥 전면 금지

# 동북아시아 해양보호생물 보전 협력체 구성

## 사례: 일본 야쿠시마 바다거북 보전 활동

- **배경 :** 일본 야쿠시마 북서부에 위치한 나가타 이나카 해변은 북태평양 최대의 바다거북 산란지로 알려져 있으며, 바다거북 보호에 중요한 지역으로 2002년 기리시마야쿠 국립공원으로 지정, 2005년 람사르조약 습지로 등록
  - 바다거북 산란·부화기에 지역민, 관광객 등 방문객수가 증가하자, 빛과 인기척에 민감한 바다거북의 산란율이 저하
- **개요 :** 2009년 12월 9일 일본 환경성은 「나가타 해안 바다거북 보전 협의회(永田浜ウミガメ保全協議会)」 설치, 협의회에서 「나가타하마 바다거북 관찰 규칙」 마련
  - 협의회는 바다거북 보호 및 산란·부화 환경 보전과 해당지역의 적절한 이용방법 검토, 협의를 목적으로 함
- **내용 :** 관찰 규칙은 바다거북 산란·부화기에는 나가타하마에 야간출입 금지, 관찰시 주의사항 등 내용 포함
  - 이 규칙은 환경성 야쿠시마 자연보호관 사무소, NPO법인 야쿠시마 바다거북관, 나가타하마 주민이 관여
  - 다만, 법적 규제는 없으며 지역의 자주적 규정이므로 이곳의 바다거북 보호활동은 지역민과 관광객의 협조 필요



[그림] 야쿠시마 나가타 이나카 해변

55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동북아시아 해양보호생물 보전 협력체 구성

## 사례: 중국 해양생물 보전 연구

- 해양보호생물의 중국 연구 동향
  - 랴오닝 해양수산과학연구원은 랴오닝 해양어업과학아카데미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해양생물 보호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어업자원의 복원 및 보존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보하이만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련시는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 및 산란처에 위치하고 있어 꾸준한 점박이물범의 구조・치료 및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내에서 범박이물범 연구의 중심지에 해당
  - 한-중 양국의 서해안 점박이물범의 보전 및 치료에 대한 경험 및 관련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시도를 2019년 진행



2019년 현지 세미나




대련 인근 주요 서식지



대련 지역 서식 생태(2019)



연구소 임시보호 수조(2019)

56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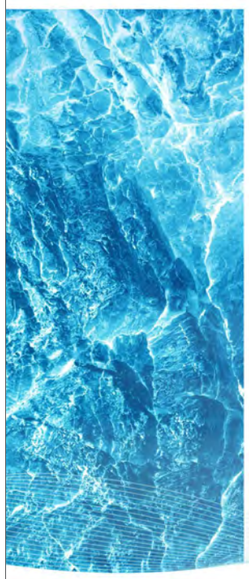


# 5. 동북아시아 해양보호생물 보전 협력체 구성

- 추진 방향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이동, 생태 및 보전(복원)에 관한 동북아해역 국제협력 기반
- **[연구협력기반 조성 단계]** 동북아 해역 해양보호생물 관련 연구정보의 교류 활성화 추진, 연구자 및 연구성과에 대한 인적, 물적 교류 정례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각국 전담기관 지정
- **[역내 국가 협력 단계]** 한중일(+북, 러) 정부 협의체, 역내 국가간 다자간 협정의 체결 등
  - 동서남해에 접한 3국 및 북한, 러시아 등과 해양생물을 매개로 한 보호 협정
  - 해양생물 보호에 관한 Agreement 수준으로, 입법적 성격이 아닌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기반조성 | 협력체 구성 | 국제협력 고도화 |
| - 주변국 해양생물 연구동향 분석<br>- 해외연구인력 DB 작성<br>- 중장기 전략기획안 마련 | - 국제해양생물협력위원회 구성<br>- 국제 워크숍 정례화<br>- 공동연구주제 논의<br>- 단계별 워킹그룹 구성 및 방향 설정<br>- 국제협력을 위한 법제도 보완 | - 종별 공동연구 착수<br>- 개별 연구성과 확산 정례화<br>- 서식지 및 생태계 공동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br>- 동북아 해양생물 보호 협정 등 체결 |

57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감사합니다

THANK YOU

본 발표자료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과제인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연구 " 와
"갯벌관리복원기본계획 수립 연구 " 의 연구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제1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1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본세션 : 공생 1

#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좌장 **최석원** 前 공주대학교 총장

발표 **투커구어**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
**지진호** 건양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학과 교수

토론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
**김상호**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대학원 박사



# 산동(山東, 齊魯)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

**투커구어**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





## 산둥(山東, 齊魯)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

산둥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교류센터장 겸 연구원 투커구어(涂可国)

문화 전파와 교류,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은 서로의 문화적 장점을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목적을 실현하고 문화 전파, 문화 융합을 실현하여 산둥 문화, 중국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화 산둥', '문화 중국'을 실현하게 된다면 대외적인 개방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산둥 문화 대외교류를 추진하고 대외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 마련, 둘째, 광범위한 산둥 문화 교류 이벤트 개최, 셋째, 해외 문화 시장 개척, 넷째, 다양한 문화 교류 플랫폼 및 매개체 마련, 다섯째, 다양한 사회적 자원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 마련

브랜드는 상품이 우수한 품질, 분명한 특색을 갖추고 소비 트렌드에 적합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혁신 과정에서 영구적인 매력을 가진다는 것을 상징한다. '문화 강성(强省)'을 건설함에 있어, 산둥성은 산둥 지역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브랜드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산둥만의 특징을 보유한, 산둥 스타일을 잘 표현하며 광범위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춘 교류 문화 브랜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산둥 문화의 대외교류 브랜드를 마련함에 있어, 현재 구조가 비합리적이고 적응력, 규모, 종합적 효과가 모두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산둥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고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이점을 갖추기 위해,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원화 된 대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독창적이고 풍부한 산둥 문화 자원을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 전략을 마련, 운영하는 한편 '유명인, 유명 기업, 유명 상품' 홍보 전략을 통해 산둥 문화가 개방과 상호 작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둥 문화의 대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가치를 선택하여 '나를 중심으로, 차별화 속에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전 세계로 산둥 문화의 매력과 지역 특색을 홍보하고 산둥의 소리를 전달하며 산둥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대외 문화 홍보 콘텐츠와 포맷을 혁신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산둥 문화 대외 교류 홍보 플랫폼을 확장하고 이전의 낡은 방식, '하드 마케팅'으로 인한 폐단 등을 제거함으로써 문화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격상해야 한다.

## 2. 광범위한 산둥 문화 교류 이벤트 개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둥성은 다양한 형식의 대외 문화 교류 이벤트와 협력 사업을 개최하여 전세계인들에게 산둥 문화를 보여주고 산둥 문화를 소개, 홍보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중국문화센터, 공자 학원 등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산둥 문화 특색이 잘 나타나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산둥-해외 중국문화센터 연도별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해외에 보다 많은 '니산문고(尼山書屋)[1]'를 조성해야 한다. 산둥 문화고전 번역 대상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문 사회 과학 성과를 출판하고, '대외문화 서비스 표준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무형 유산, 무대 예술, 미술, 문화재, 애니메이션, 도서, 산업 프로젝트 등 자원을 종합함으로써 체계화, 조직화, 표준화 된 대외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

산둥 문화 대외교류 이벤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산둥 출신의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산둥 관광객, 유학생, 사업가, 공무원 등 산둥 문화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 홍보대사를 육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산둥 문화 전파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산둥 오페라(呂劇), 산둥 전통극(梆子腔), 태산 그림자극(皮影戲), 버드나무 공예품(柳编), 검은 간토기 등 산둥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문화 상품을 과감하게 해외로 전파하고 해외 순회 전시회, 순회 공연 등을 개최한다. '공자문화상', '공자교육상' 등 평가 이벤트를 확대하고 '산둥 문화 전파상'을 새롭게 제정한다. 산둥

[1] 중국 산둥성 문화청과 산둥출판사, 산둥여우이출판사가 공동 제작 출판한 제(濟)나라, 노(魯)나라의 문화 관련 도서





문화 대외 전파의 개별성, 적절성을 강화하고 전파 대상이 느끼는 바와 이들의 문화적 배경, 종교, 민족성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 전파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국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호 교류 방식의 이벤트를 개발하고 경영학 이론 중 '프로젝트 관리'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산둥 문화 교류 전파 프로젝트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산둥 문화 대외 전파, 교류 업무와 홍보 이벤트를 프로젝트화한다.

## 3. 해외 문화 시장 개척

산둥 문화 해외 수출 전략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정부 부처의 의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과장되고 확대되어 정부의 '책임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성공 경험에 비춰볼 때 시장 경제 조건과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문화 경쟁 구도 속에서, 정부는 공익적인 무료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이것이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 해외 진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는 자주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산둥 문화를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둥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둥 문화 해외 진출 방식과 채널을 혁신하며 대외 문화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화 기업이 산둥 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도 해외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항목을 창작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대외 문화 예술 및 예술 전시 등 분야의 교류 수준을 높이며 산둥 작품의 인지도와 명성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둥성 문화 무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무역을 관리,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문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장기적, 효율적 업무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산둥성만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지역 문화 특색이 분명한 애니메이션 상품, 온라인 게임, 영상 제품 수출을 지원하고 시장 전망이 밝으며 잠재력이 큰 핵심 문화 무역 기업을 육성한다. 산둥성의 우수한 영화 작품이 해외 메인 영화관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 장기 전시 및 순회 공연이 가능한 문화 상품을 개발한다. 산둥 문화 기업이 해외 전시

회 및 홍보, 교육, 입찰 등 시장 개척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저명 기업, 문화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산둥 문화 창조 산업 박람회, 해외 프로젝트 전시회, 투자 상담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외 문화 무역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기업이 글로벌 시장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4. 다양한 문화 교류 플랫폼 및 매개체 마련

플랫폼과 매개체를 마련하여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우수한 운영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마련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산둥성은 산둥 문화 대외 교류 홍보 플랫폼과 매개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아이디어, 불완전한 계획, 불안정한 기초, 부정확한 연계, 불분명한 효과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의 '문명교류 상호 학습',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등 전략적 이념에 근거하여 우수한 산둥 문화와 해외 문화의 상호 융합을 추진하고 유익한 해외 문화 성과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각종 대외 문화 교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파 방식을 혁신하고 전방위적이며 다양한 산둥성의 대외 홍보 구도를 조성하여 문명교류 상호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문적인 산둥 문화 대외 무역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산둥 문화를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팀과 관리팀을 육성한다. 둘째, 조화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 문화의 해외 진출을 책임지는 문화 기관과 문화 기업을 만들어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산둥성 내 문화, 비즈니스, 대외 홍보, 외교, 금융 등 분야의 전반적인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산둥 문화 홍보 업무를 위한 연석회의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홍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 문화와 관련된 대외 홍보 미디어의 홍보 업무를 지원하여 홍보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산둥 문화 교류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넷째, 연구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성 내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취합하여 산둥 문화를 위한 전문 연구 기관을 개발, 확장하며 산둥성과 홍보 대





상 국가간 문화, 국가 현황, 관습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다섯째, 대외 번역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 문화 번역 홍보 센터를 설립하여 산둥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5. 다양한 사회적 자원 동원

산둥 문화는 거대한 규모의 다원화된 체계로, 여기에는 역사 문화 자원, 자연 인문 자원, 종교 문화 자원, 민간 문화 자원, 혁명 전통 자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 민간, 기업, 기타 사회 자원이 함께 교류하고 전파하는 방대한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첫째,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무역,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언론 출판, 관광, 스포츠, 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 등 정부 기관과 관련된 산둥 문화 대외 홍보 자원을 취합하고 대외적 자원과 대내적 자원, 정부 자원과 비정부 자원을 통합하여 각 분야의 외부 역량을 동원함으로써 대외 홍보를 위한 힘을 마련해야 한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성(省)위원회 대외홍보판공실, 성 정부 외사판공실의 지도 아래 시, 현(시, 구) 정부의 대외 홍보 업무 계획, 조정, 지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성 전체에서 산둥 문화 대외 홍보 업무가 상하 연계된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대내적인 힘과 대외적인 힘을 결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둥 문화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주도적, 전면적으로 홍보 업무를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둥 문화의 '해외 유입' 기능을 통해 맞춤형 자원을 집중적으로 흡수, 융합한다. 이와 같이 '해외 진출'과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결합하여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구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문화 대외 전파 '관리'와 '추진'을 결합해야 한다. 한 손으로 잘 관리하고 다른 한 손으로 잘 추진하여 상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둥 문화 대외 교류 전파라는 큰 틀이 조성되도록 한다. 산둥 문화 대외 전파를 위한 업무 '요점'을 잘 파악하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확인하여 이것이 대외 전파 업무의 '핵심'이 되도록 한 뒤, '요점', '이슈', '핵심',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의 '라인(line)'을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육 교류와 관광 교류를 결합해야 한다. 산둥의 풍부한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 자원, 지리적 이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 관광 영역을 확대하고 해

외로 문화 관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외 관광객들이 산둥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산둥 문화와 세계인들이 관광을 통한 광범위한 교류를 하도록 하여, 관광 글로벌화를 통한 산둥 문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산둥 문화를 이해, 체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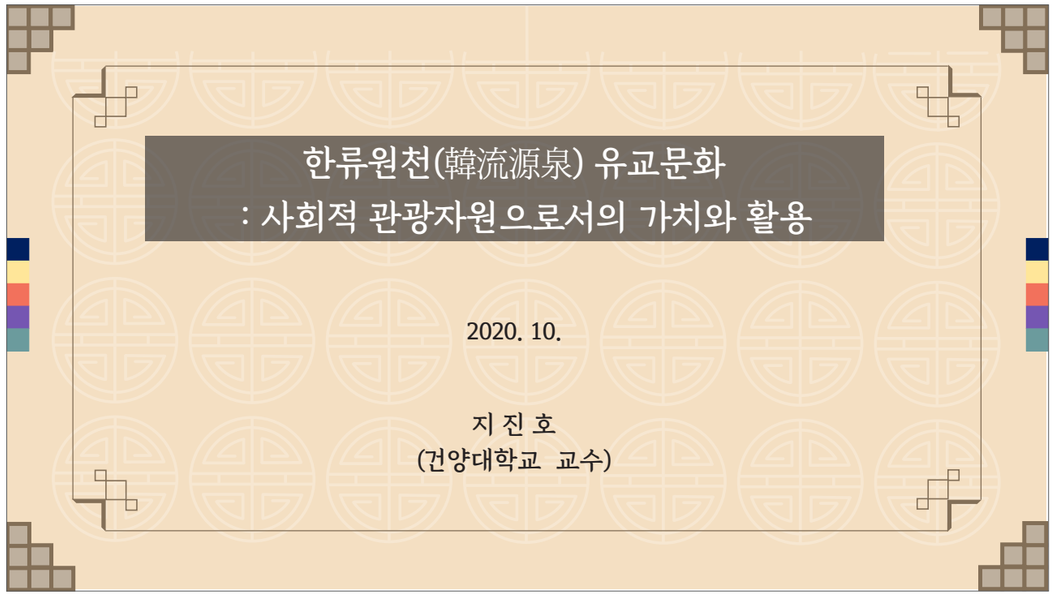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 한류원천(韓流源泉) 유교문화 :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지진호** 건양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학과 교수










## Ⅰ.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

- 현대인들은 유교문화를 진부하고 퇴행적이며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진지함의 대명사로 인식
- 유교식 전통관례나 가치관이 전세계 실시간 교류수단인 SNS발달로 급속하게 퇴조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환황해권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유교의 중요성은 약화 되었으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사회가치에 대한 탐구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음






3

- 유교의 인본주의로 허물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현실 참여적이며 실천적인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국가간, 지역간 소통로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특히, 유교문화는 K-pop, K-drama, K-food 등 주요 한류 컨텐츠의 원천이며, 소중한 인문자산임





4





## Ⅱ. 유교문화와 한류의 상관성

- 한류는 유교, 불교, 기독교 문화가 융합되어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유교문화임
- 가족중심, 나보다 우리 공통체 우선, 자기계발과 같은 유교문화 전통이 한류의 바탕
- 즉, 유교문화라는 토양에서 배양된 문화적 자산을 문화 컨텐츠로 승화시킨 것이 한류
- 유교문화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나타난 것이 한류




5

## Ⅲ. 한류 관광자원으로서 유교문화의 가치

- 관광자원은 “관광동기를 유발시키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보존 또는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위험이 있는 자원”의 총칭
- 사회적 관광자원은 풍속, 생활관습, 종교, 예술, 교육, 축제, 행사 등이 상호 유기적 결합으로 관광충족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임




6

- 한국의 유교문화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생활속에 남아 있는 실천문화
- 학문과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동체 이상을 구현하려는 실천철학인 유교는 문화예술, 컨텐츠 산업, 관광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보고(寶庫)
- 특히, 국가의 특성이 응축되어 있는 유교문화는 실용성과 결부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IV. 한류 컨텐츠로서 유교문화의 보존과 활용

## 1. 유교문화, 원 아시아(One Aisa) 컨텐츠

- 유교문화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국가제도와 법질서에 반영되어 왔음
-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규범에 영향력을 주어 이 지역 국민들의 삶을 지배해 옴
- 특히, 유교문화는  효,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 예절 등에서 두드러져 사회생활의 근간으로 존재












- 원 아시아 컨텐츠로서 유교문화의 활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은 정신적 자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과 분야별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제고 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천의 얼굴을 가진 문화 " 로서 유교문화는 “사람을 낳고 기른 유구한 역사”이므로 원 아시아 문화 컨텐츠의 힘을 상징
- 원 아시아 컨텐츠로서 유교문화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야 현재적 의의와 실용적 의의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한류라 할 수 있음







## 2. 유교문화, 소통과 통합을 위한 자산

- 유교문화가 추구했던 보편성은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함
- 환황해권 국가의 공통적인 정신가치인 유교를 통해 대(對)에서 공(共)으로, 분(分)에서 합(合)으로, 경(競)에서 화(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공유 작업이 가능
- 즉, 유교의 공유(共有), 공감(共感), 공존(共存), 공생(共生)의 가치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모색 할 수 있음





- 오랫동안 축적된 유교적 가치와 지식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문화자산
-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국가간, 지역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유교문화는 환동해권 국가로 들어오는 수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밟아야 하는 “플렛폼 " 이라 할 수 있음







### 3. 한류 컨텐츠로 활용된 유교문화

- 2007년, 한국정부는 신 한류조성 노력의 핵심사업으로 한 스타일(Han style, 2007~2011) 6개 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국악)의 육성 종합 계획을 공표
-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의 장점을 부각시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그 핵심 토대는 유교문화임











- 한 스타일과 같은 문화컨텐츠 개발의 원동력은 상징력과 상상력이라 할 수 있음
- 오랜 역사를 가진 유교문화는 상상력의 바다로서 “한류원천 " 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유교의 다양한 인물과 스토리(Story)는 지속가능한 한류의 조건이 되고 있음








## V. 전망과 과제

### 1. 전망

- 원 아시아 컨텐츠로서 유교문화는 실체적인 다양한 문화재가 남아있고, 사상과 철학, 사건과 일화 등 무형가치가 풍부하므로 이벤트와 축제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높여 갈 것으로 기대됨
- 유교문화 컨텐츠는 지속적인 한류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또한, 유교문화는 비 정치적 수단으로 환황해권 국가간 소통의 통로로 활용되어 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2. 과제

- 유교문화가 박제화 된 문화에서 탈피하여 현재화 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함
- 또한, 유교문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규범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류처럼 동시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함
- 유교문화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자산 또는 문화 컨텐츠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







감사합니다



제16회

#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 본세션 : 공생 2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좌 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병원장

발 표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토 론 **왕슈안이** 푸단대 의생물학연구원 연구위원
**엄주현**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김순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 Covid19 유행과 감염병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 -Covid19 유행과 감염병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전(한양의대)

## 1. 들어가는 말

2020 년 9 월 22 일(미국 뉴욕시간)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 75 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 중 10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 연설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
>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그리 길지 않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안보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중보건 문제가 핵무기 이상으로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과거 첨단무기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 중심에 공중보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래의 안보 패러다임이 적대적이 없다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각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작금의 코로나 19 팬데믹은 튼튼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축없이 경제성장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제안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유만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도 크다. 이는 방역, 보건협력없이 경제발전도 교류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제협력의 불가피성이다.** 균에는 국경이 없다. 말라리아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한 나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특별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의 제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필수불가결한 접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다 검토하기도 전에 서해 앞 바다에서는 표류중인 사람에 대한 피격사건은 잠시나마 남북한 긴장관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서해가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 될 수도, 전쟁과 파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 2.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코비드 19 유행과 대응

### 2.1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코비드 19 유행 대응

2020 년 3 월 11 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코비드 19 유행은 2019 년 12 월 8 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월 25 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3240 만이 넘는 확진자와 100 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낳고 있다.

#### 중국

중국은 현 코비드 19 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고, 당연히 초기 가장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1 월 23 일 우한 시 봉쇄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시작되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규모 국가 동원도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대규모





의료, 격리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3 월 28 일부터는 국외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도 시행했다. 초기 대량 환자 발생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 월부터는 정상화과정을 시작하였다. 9 월말 현재, 약 8 만 5 천명의 환자와 4,636 명의 사망자, 치명률 5.4%, 발생률은 인구 100 만명당 59 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자신들의 코비드 19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미국은 유행초기 중국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전 세계 유행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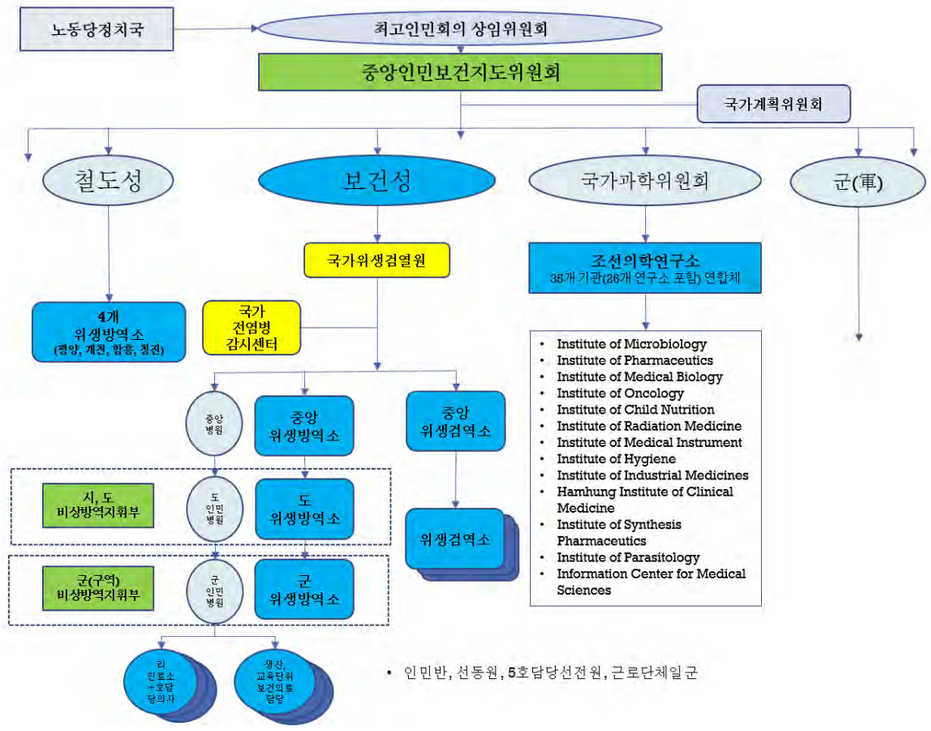
중국과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 코로나 19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 월 22 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고, 25 일부터는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국경폐쇄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30 일자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특별히 북한 경제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방역 총력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 활동은 (1) 국경 폐쇄와 검역강화, (2) 방역사업, (3) 환자의심자 발견 및 격리, (4) 위생선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 도, 시, 군마다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에 대한 위생교육,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지도 활동, 호담당의사 조직 등을 활용한 유열자(발열환자) 발견과 격리, 검역소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2 월 12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코로나 19 의 격리기간을 기존의 15 일에서 30 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의 잠복기가 기존에 알려진 14 일이 아니라 24 일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진단검사 키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 월 현재까지도 코비드 19 환자발생이 없었다고 발표하고 있고, 6 월 초에는 개학을 재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코비드 19 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북한 대규모 감염병 유행 대응 방역체계도>




**일본**

일본은 2020 년 2 월 13 일 코비드 19 로 인한 공식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올해 7 월 예정되어 있었던 도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검사와 환자발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초기 코비드 19 대응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3 월 25 일 올림픽 연기가 발표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4 월 6 일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9 월말 현제 확진자수는 8 만 명, 사망자수도 1550 명을 넘었다. 치명률은 1.9 명 발생률은 인구 100 만명당 643 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비드 19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량검사, 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빠르게 발생자와 사망자의 발생을 줄인 대표적인 나라도 평가되고 있다.

9 월말 현재, 확진자수는 약 2300 명(발생률 457 명/100 만명), 사망자수는 약 400 명(1.7%)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대응성적을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별, 코비드 19 확진자수, 발생율, 치명율>

(2020 년 9 월 25 일 현재)

| | 한국 | 북한 | 중국 | 일본 | 미국 | 프랑스 | 인도 |
|---|---|---|---|---|---|---|---|
| 확진자수 | 23,455 | | 85,322 | 81,315 | 7,185,471 | 497,237 | 5,818,570 |
| 발생율 (확진자수/100 만명) | 457 | - | 59 | 643 | 21,708 | 7,618 | 4,216 |
| 치명율(%)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 1.7 | - | 5.4 | 1.9 | 2.9 | 6.3 | 1.6 |

출처: CoronaBoard

## 2.1 코비드 19 유행으로 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부문 협력의 문제점

공식적인 통계치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코비드 19 대응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4 개국은 초기 대량환자발생에도 불구하고(북한제외), 미국, 유럽, 인도, 남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자국이 발표한 통계치에 근거한 '상대적' 평가일 뿐, 코로나 19 대유행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중에서 동아시아 보건·위생분야 국제협력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재난적 상황 하에서 기존의 국제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자기 국가 내의 유행병 대처에도 힘겨웠던 까닭도 있지만, 어떤 시기보다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사실 상 방치상태에 놓이고 있다.

특별히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하에서 물자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중 국경의 폐쇄,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1) 대량의 검사장비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확보 어려움에 따른 진단 역량의 한계로 인한 문제, (2) 적절한 격리 시설, 보호장비 확보의 어려움, (3) 셋째, 치료시설, 장비, 약물의 한계, (4) 넷째, 정보의 투명성과 실시간 전문정보의 공유 한계와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둘째, 국가간 전문적인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그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정보의 신속한 교환은 대응의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국가간 정치, 경제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국제적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작업은 감염병이 시작된 지 10 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정보는 상대 나라의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술저널을 통한 정보의 습득은 그 출판 과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3. 남북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등 공중보건·위생 협력 현황

감염병은 코비드 19 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남북 보건·위생 교류현황은 국가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류의 가능성, 한계, 과제를 잘 보여준다.

남북 정부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통해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접 지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 진행되는 정부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균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남북간 협력은 많은 전례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남북 경색국면 이전까지 국내 민간단체,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공중보건·위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 예방접종, 약제지원

2006-7 년 북한의 대규모 홍역 유행시기에는 국제기구와 함께 6 개월-45 세 1620 만 명(전제 주민의 70%)에 대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7-8 년에는 소규모지만 헤로필루스 인플루엔자 B 백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9 년 12 월 이명박 정부는 타미플루 40 만명 분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 만명 분을 북한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2010-11 한국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독일 카리타스를 통해 북한 어린이(7 세-16 세) 약 370 만명에 대해 B 형 간염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3-14 년에는 2-4 세, 9-16 세 아동 3,154,792 명에게 일본 뇌염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5 년에는 다시 홍역-풍진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 차 250 만명을 진행한 후 2 차 300 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개성공단폐쇄라는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2015 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시기 북은 열 감지 카메라 3 대 등 검역장비의 지원을 남측에 요청하여 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 결핵

북한의 결핵관리 분야는 남북간 협력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2017 년까지 약 7 년간 1 억 300 만달러(약 1500 억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7 년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환자는 13 만명에 달해,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 개국에 속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 차 결핵 치료에 실패해 생기는 다제내성 결핵(MDR-TB)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 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 년 2 월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해오던 글로벌 펀드가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사업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매겼던 사업에 대해 중단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지원중단을 선언한 것이 미국의 경제제재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계결핵보고서는 북쪽의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많은 원인의 48%가 만성적인 영양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만연과 사망이라는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말라리아

감염병관련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 낸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 공동 감염병 관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될 경우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지는 2010 년 말라리아 사업이 잘 보여준다. 2010 년 천안함 사건 등을 이유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마침내 대북 말라리아 방역 지원까지 중단한 탓에 남한 내 말라리아 환자도 늘어나 서둘러 지원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지원이 중단되자 작년 1~6 월 경기 지역 말라리아 환자 수가 153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한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여 남북 공동방제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정치적 경색국면으로 인해 기본적인 정보 교환조차 못하고 있다.

**<그림 2.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현황>**




사진출처: NEWSIS (2019.10.2)





**최근 상황**

2018 년 9 월 19 일 남북정상 간에 평양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2007 년 10 월 4 일 공동선언과 비교할 때 (1)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2) 정상회담 문구에 '전염병', '방역'이란 단어가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표 2. 10.4 공동선언(2007)과 9.19 평양선언(2018) 비교>**

| 10.4 공동선언(2007.10.2-4) | 9.19 평양선언(2018) |
|---|---|
| 북과 남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지구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 - |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후 2018 년 11 월 7 일에는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이 진행되어, (1) 연내 전염병 정보교환, (2) 결핵,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에 협력/실무적 내용은 문서교환, (3) 포괄적, 중장기적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2019 년 12 월 12 일에는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정상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려던 타미플루 지원 사업은 지난 2019 년 1 월 유엔사가 경제제재를 이유로 트럭 이동을 문제 삼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여전히 감염병 협력과 같은 필수적이고 인도주의적 협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 4.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부문 협력 필요성과 과제

### 4.1 협력의 필요성

그간 감염병관련 남북교류의 역사,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사례와 같이 그간 남북 감염병 공동 대응에는 한계가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협력의 잦은 단절 문제이다.** 이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보건의료부문, 특히 감염병 대응은 비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과 생존을 위해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잦은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는 상호 협력과 교류 인프라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이는 다시 일회성, 소규모 협력 중심으로 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둘째, 적시 지원의 실패이다.** 공중보건·위생 협력에서 잦은 단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적시에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신력 있는, 일정 수준상의 규모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 간의 일상적 소통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한다.

**셋째, 교류협력의 규모 문제이다.** 국가간 공중보건·위생 협력이 일정정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협력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규모 민간단계 간의 협력은 효과와 효율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전문성 문제이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생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경우가 많다. 다제내성결핵 문제, 코비드 19 유행 등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따라서 국가간 협력은 해당 전문가들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문제이다.** 이번 코비드 19 유행의 여파가 큰 것은 그간 이런 감염병 대유행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신속한 사례발굴 및 정보전파, 그리고 빠른 국제적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는 공중보건·위생분야의 협력이 소규모 민간단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경우, 남북간 보건의료부문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어 내기는 어렵다. 이번 코비드 19 대유행과 북한의 홍수, 태풍 피해 상황에서도 사실상 남북 간 아무런 상호 정보교환이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마주 앉아 코비드 19 나 기타 공중보건·위생 문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국, 일본 등 다자협력체계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감염병과 재난 등이 전 지구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발생과 전파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접국가 간의 보건의료협력은 안보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보건안보적 측면 외에도 이번 코비드 19 유행에서 확인되었듯이 효과적인 국가간 감염병 협력 없이는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특별히 관광분야만 살펴보더라도 매년 600 만명의 중국관광객과 200 만명의 일본 관광객이 코비드 19 로 인해 오지 못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 연간 금강산 관광객수는 100 만명에 달했는데, 이 역시 남북한 검역, 공중보건 협조체계 하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북한 역시 코비드 19 로 인한 국경폐쇄로 통상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평양국제마라톤 대회 등도 취소되고,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 있게 추진 하던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코비드 19 대유행이 끝난다해도, 향후 무역, 관광산업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방역과 검역 협력체계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코비드 19 유행시 자국문제에 대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득국가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나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 4.2 협력과제

**최근 몇 가지 움직임**

2019 년 6 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제 2 회 '아시아 결핵퇴치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2015 년부터 몽골 결핵퇴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STOP-TB Partnership KOREA 가 몽골 보건부와 몽골 결핵퇴치국회의원연맹, 몽골 국가전염병관리센터와 함께 2018 년 1 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였다. 여기에는 한국, 몽골,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러시아 등 아시아 7 개 국가의 결핵 전문가 및 연구자, 관계자 등 약 120 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간 경색국면 하에서 남북간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사실상 모든 연락선이 끊어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결핵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시아 결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로 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4 월 7 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개최하는 ASEAN+3(한·중·일) 보건분야 장관급 회의(영상회의)에 김강립 차관(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조정관)이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하였고, 아세안 10 개국과 코로나 19 관련 각국의 대응과 아세안 회원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올해 보건장관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코비드 19 에 대한 아세안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 회의에서 김강립 차관은 한국 대응체계에 대한 특징과 대응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한국 코비드 19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아세안 각국이 코로나 19 를 대응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방역체계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코비드 19 공동 대응의 유지와 발전, 코비드 19 사태 극복 이후의 경험 공유, 공중보건 긴급상황 및 위기에 대한





지속적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 향후 조직적 발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코비드 19 초기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며, 각국 전문가들이 실시간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고, 부족한 정보, 물자들에 공동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할 만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런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향후 협력과제**

앞서 언급된 동북아시아는 '환황해권'[1]과 일치한다. 환황해권 지역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한국의 서남해안 8 개 시도, 중국의 발해만 지역, 일본의 규슈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황해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계획에 등장하는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경제벨트의 하나에 해당한다.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실효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관계가 그 대표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정치적 갈등과 남북한의 정치적 경색이 심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또한 상호공동의 이해를 가져오는 공중보건·위생분야에서 그 갈등을 넘어서는 사례들을 만들어낼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협력체계는 기존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 지구(WPRO), 동남아시아 지구(SEAR)의 역할을 공유하면서, 이 두 지구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협력체계 구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정부들 간 협정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은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을 위해 그동안 '제 1 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합의서', '남북

[1] '환황해권'이란 단어가 한국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것은 1989 년 4 월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주임인 凌星光이 동북아 경제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다. 凌星光은 환황해권의 중심을 중국 대련(大連)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매일경제, 1989 년 4 월 4 일자).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 1 차 회의 합의서' 등의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다.

'보건의료협정서'에는 조성렬(2009)의 제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방식
(2) 공동방역협조체계 구축 방향
(3)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제공방식
(4) 남북 보건의료 전문 간 교류와 협력방안
(5) 재난이나 응급의료 수요 발생시 공동 협력방안
(6)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

남북 간 보건복지협정이 실효화 되기 위해서는 이를 남한 내에서 실효화 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위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히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보건협정의 내용과 기존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 간에 이루어진 보건관련 협정들을 코비드 19 대유행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는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파리선언 [2]의 내용을 포함함과 동시에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황해 공중보건·위생 협력 범위와 대상의 확대**

현재 시점에서 코비드 19 대응이 중요하지만,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매우 많다.

무엇보다 코비드 19 로 인해 잠시 잊혔지만, 한국은 최근까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감염병 공동대응에 더하여

[2] 2005 년 파리에서 진행된 제 2 차 고위급회의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에 처음 합의를 만들었다. 이를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파리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더불어 성과 측정과 공여국/수원국 상호책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였는데, 파리선언의 5 가지 중점 원칙은 (1) 수원국의 주인의식, (2) 수원국-공여국의 원조 일치, (3) 공여국-공여국의 원조 조화, (4) 원조 성과관리. (5) 상호책무성이다.





미세먼지 문제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들도 남북한과 중국이다.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쓰레기, 건설폐기물 등으로 인한 바다 오염 역시 한 국가가 대응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산림 병충해도 인접국간 협력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환황해권 감염병 협력체계'가 '환황해권 공중보건 협력체계'로 발전하면서 이 틀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 예 중 하나가 아시아 어린이 건강문제를 동북아 국가들이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나가는 아시아 어린이 기금(가칭 Asia Children's Fund, ACEF )[3]의 설치이다.

초기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동북 아시아/환황해권 방역·보건 협력체는 다음단계로 동북아시아 건강협력체로, 다시 아시아 전체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체로 그 협력 내용 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5. 소결

"우리는 미생물로 가득한 하나의 호수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말한 브룬트란트 (Gro Harlem Brundtland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세균과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 19 유행은 한때 과학발전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 믿었던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얼마나 재난에 나약하며 또한 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감염병 유행이 마지막 유행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유행(2013-14), 중동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5)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는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아시아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감염병의 대유행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14 세기 흑사병(약 1 억명 사망 추정), 20 세기 스페인독감(5000 만명 사망) 등 많은 감염병 유행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감염병 유행은 오래전 대유행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인간이 야기한 생태계파괴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지역간 이동으로 인해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한 위험의 크기가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이 일개 국가를 넘어 전 인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염병 관리만큼은 그 내용의 전문성, 파급효과, 범영역에서의 대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단체가 주도하기 보다는 여러 나라,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정부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교환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각 국가 전문가간 실시간 긴밀하고 정교한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우선적으로 다양한 감염병(사람, 인수공통, 동물 전염병)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산림 병충해와 같은 방제작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원 헬스(one health)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원 헬스'란 좁게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체계를, 넓게는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현재 코로나 19 유행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히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전문가, 당국자 간 협의체계를 가동하고, 보호장비, 검역장비, 진단장비, 치료약 등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에볼라,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의료규제(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의 강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안보의제(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그룹의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감염병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감염병 유행을 빌미로 강대국이 약소국들의 내정에 비민주적으로 개입하거나 강대국의 국제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감염병 유행이 개개인의 개인신상정보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 역시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솔선수범의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특정 국가의 독주를 막아 내기위한 지역적 대응 역시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은 기존의 국제협력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견고한 국제적 협력 없이는 경제성장도,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적대'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보다 견고한 지역 공중보건·위생체계를 구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제6회
환황해포럼
6th Pan Yellow Sea Forum




## 제6회 환황해포럼 사무국

**(사)한반도평화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733호

**이메일** 2020pysf@gmail.com

**전화번호** 02-707-0615 / 02-3669-3095

주최 Host | 충청남도 주관 Organizer | 한반도평화포럼 Korea Peace Forum 후원 Sponsor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